시민운동 종합정론지

월간 경실련

통권 165호 | 2018 09 10 호

규제를 풀면 경제가 풀릴까?

특집: 규제를 풀면 경제가 풀릴까?
혁신성장을 가장한 은산분리 완화와 규제개악 중단해야

시사포커스
2018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

우리들 이야기
회원인터뷰 –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혜화동이야기 – 배우 강신일 인터뷰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시 민 운 동 종 합 정 론 지
월간 경실련

커버스토리

정부가 혁신성장을 하려면, 땜질식 처방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촛불혁명의 동력이 남아 있을 때,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을 통해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입니다.

〈규제를 풀면 경제가 풀릴까?〉

CONTENTS

동숭동 칼럼

10 부동산 대책은 국민 주거권 보장이다 / 윤순철

30주년을 바라보다

12 경실련이 묻다! 이근식 前공동대표 인터뷰 / 윤은주

특집, 규제를 풀면 경제가 풀릴까?

18 ① 규제를 풀어주면 경제가 풀릴까? / 조연성
25 ② 혁신성장을 가장한 은산분리 완화와 규제개악 중단해야 / 권오인
29 ③ 빅데이터 활성화하면, 국민이 행복해질까 / 윤철한
32 ④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구분 / 최예지

시사포커스

37 ① 2018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 / 김삼수
43 ②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법 / 정택수
48 ③ 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절실 / 김진현
52 ④ 공공건설 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최승섭
55 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세미나 / 오세형

12 30주년을 바라보다
이근식 前공동대표 인터뷰

55 시사포커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시민운동 종합정론지 2018_09, 10월호 | 월간경실련 통권 165호

경실련 |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렴 목영주 **중앙위원회의장** 이의영 **상임집행위원장** 채원호 **정책위원장** 소순창 **사무총장** 윤순철
월간경실련 | 발행인 윤순철 **편집인** 채준하 **편집기자** 윤은주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고번호** 종로마 00088 정보간행물 **전화** 02)766-5627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발행** 2018년 09월 17일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6-5627 **Fax** : 82-2-741-8564~5 **Homepage** : http://www.ccej.or.kr

지역이야기

58 민선 7기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의 역할 / 김송원

우리들 이야기

60 ① 회원인터뷰 –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 윤은주
67 ② 제1차 경실련 아카데미 "회원과 함께 정의를 세우자" / 노건형
71 ③ 혜화동이야기 – 배우 강신일 인터뷰 / 윤은주
78 ④ 문화산책 – 영화 '공작'에 그려진 우리 사회현실 / 서휘원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83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84 경실련 일일보고
88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60 우리들 이야기
회원 인터뷰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71 우리들 이야기
혜화동이야기
배우 강신일 인터뷰

동숭동 칼럼

윤순철 사무총장
yunsc@ccej.or.kr

부동산 대책은 국민 주거권 보장이다

아침에 신문을 보니 "그 때 집을 샀어야 했는데" 집을 안사서 상대적 박탈감에 가정불화와 울화통이 늘었다고 한다. 결혼 앞둔 20대는 집 주소가 스펙이 됐고, 집 없는 30대는 몇 년 전에 집을 안사서 죄인이 됐고, 실기한 40대는 이제는 더 이상 서울로 이사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우울하고, 집 있어도 고민이라는 50-60대는 주택연금 가입하고 싶어도 증여 바라는 자식들 눈치 보여 못한다는 얘기다. 지방에서 아무리 부자라 큰소리 쳐도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없으면 부자가 아닌 것이 현실이 되었다. 한의학적으로 울화병은 기뻐하고, 성내고, 걱정하고, 사려가 많고, 슬퍼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감정의 칠정병과 관련이 있는데 이 중 성내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놀라는 감정이 부동산 울화병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9월 초에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8월까지 서울 주택가격이 49개월(4년1개월)째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기존의 최장 상승기는 참여정부의 44개월(2005년 2월부터 2008년 9월)보다 5개월이 더 늘었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도 7억 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2014년 8월 한 채에 4.9억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지난달 7.2억 원으로 약 2억 원(42.1%)이나 올랐다. 강남과 용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1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난 곳도 많은 것으로 공개됐다.

사정이 이러니 남의 집 살이 하는 서민들이야 소득은 별로 늘지 않는 데 천정부지로 뛰는 집을 산다는 것은 언감생심일 것이다. 조금 더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품었던 중산층도 마찬가지다. 전체 가구의 44.5%(862만)인 무주택 가구들이 뛰는 집값과 자신의 소득의 괴리에 울화병이 안날 수 있겠는가? 부동산 울화병은 부동산 광풍이 가라앉거나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지 않는 한 치료법이 없다.

다급해진 정부와 여당이 나섰으나 답답하다. 집값 잡겠다며 부부합산 7000만원 초과자는 전세보증 대출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가 들 끊는 여론에 밀려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렸다. 국토교통부와 사전조율 없이 여의도 · 용산 개발을 공언했다가 집값 폭등에 놀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 사업들을 전면 유보한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러자 이번엔 국무총리 출신의 7선의 국회의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자유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역시 동조하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그린벨트 해제하여 이미 밝힌 30만 가구 외에 추가 공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모처럼만에 협치를 본다. 그러나 공급확대는 집값만 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현재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은 참여정부 출신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적인 공급확대론자이다. 그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2001년 5월 판교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고, 이 판교개발로 분당, 용인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1-2주일에 5000~1억 원이 오르자 2005년 부동산정책간담회에서 판교신도시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되었다. 당시 부동산정책에는 이해찬 총리와 김병준 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김수현 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국정과제비서관과 국민경제비서관으로 부동산 문제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해찬 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 만들 것"이라 장담하며 만든 8.31대책에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실거래가의무화 등 좋은 것도 있었으나 송파신도시 개발이 끼어 들어가 8.31정책효과는 반감되고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6년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것이 부동산이며,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시인할 정도였다. 결국 참여정부는 파주(2003), 판교(2003), 광교(2005), 김포(2006), 송파(2007), 검단(2008) 등 많은 신도시개발 계획을 쏟아내었음에도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당시 "정부와 반대로 하면 돈 번다"가 유행어가 될 만큼 시민들은 정부 정책을 불신하였다. 그런데 다시 신도시 망령이 돌아오고 있다. 이미 그 개발계획들이 허황된 것임을 경험하였음에도.

부동산 대책은 국민 주거권 보장이다. 영국 중앙은행은 땅이 부의 저장수단으로 쓰일수록 생산적 자본은 줄고 가계부채는 는다고 지적한다. 다시 근본,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가야한다. 정부가 부동산 자산가들 보다는 850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권 보장에 정책력을 집중해야한다. 그리고 세금을 깎아줄 땐 깎아주더라도 합당한 세금이 얼마인지 똑바로 계산하기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한다. 또한 가용 토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처럼 땅의 희소성을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정확한 과세표준을 바로잡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야한다. 부동산을 시가 평가해서 과세하는 보유세는 땅 부자와 공무원의 유착이 심할수록 과세표준을 임의로 낮춰 세금을 깎는 현상이 보편적인데 제대로 일할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집권 20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20년을 간절히 기대한다.

[인터뷰]
“정부는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가를 사전에 잘 따져 보아야 해요.”

(이근식 前공동대표)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i78@ccej.or.kr

이번 호 30주년 기념 특집인터뷰는 이근식 전 공동대표입니다. 이근식 대표는 경실련 초대 정책위원장이셨고, 공동대표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경제학자로 사회운동가로 쌓아 오신 연륜과 깊이만큼 우리 사회를 걱정하며 해주신 말씀들이 참 소중합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지내시며 가끔 서울에 다니러 오시는데 경실련 인터뷰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Q.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글쎄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실업과 가난, 노후 불안, 양극화, 주택가격 상승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제문제도 사실은 국민들의 욕망이나 의식이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에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서울 강남 살고 싶어 하고, 일류대학에 자녀 넣고 싶어 해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생각이 있는 한 입시지옥은 안 없어지고 서울 아파트 값은 안 내려가요. 나는 경실련에서 정책위원장 하면서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게 교육이구나. 이게 노동문제보다 더 힘들구나. 자기 자녀들 SKY 대학 보내려고 어거지 주장을 막 하거든요. 하나마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 생각이 조금 건전해져야 해요.

독일은 가봤더니 학벌에 대한 집착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진짜 없어요. 일류대학 가겠다는 욕구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들이 공부를 썩 잘하면 대학교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직업전문학교 보내고 그래요. 직업전문대학 나왔다고 살아가는데 차이가 없어요. 봉급도 직업에 상관없이

다들 비슷하고 학력이나 직업에 따른 차별이 없어요. 사람들이 차별을 안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해요. 학벌 따지고 집안 따지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Q.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이전 정부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죠.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잘사는 사람 편을 들었거든요. 기업 편들고. 반대로 이 정부는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편을 들려고 해요.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은 옳아요. 소득을 올리면 수요가 증가하여 경제가 살아나는 거는 지금 이 정부가 처음 말한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케인즈가 1935년에 출판한『일반이론』에서 한 얘기에요.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가면 경제가 살아난다. 그건 당연한 거에요.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시장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실시할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글쎄 이 부분은 정부가 의욕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문제인 거 같아요. 정부는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가를 사전에 잘 따져 보아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급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을 잘못

되었지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지원을 늘려야지 임금을 억지로 올리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부작용은 큰 정책이지요.

정치인들은 말장난을 많이 해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건 공공복지 늘리겠다는 얘기고,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산업에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새로운 거 에요. 하나도 안 새로운 거 에요. 어느 정부든 해야 될 일이에요. 정책 평가를 하려면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데, 내가 요즘 그런 걸 잘 알지 못하니 이렇게 벙벙한 소리밖에 못 하네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높이는 게 좋은 방향이에요. 보유세를 높이면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거든요. 그대신 양도소득세는 좀 낮춰 주는 거죠.

Q. 어떻게 경제학 공부를 하게 되셨고, 경실련 활동은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나요?

A. 경제학 배우면 당시 몹시도 가난하였던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요즘은 별로 인기가 없지만 내가 대학교 갈 때는 다들 나 같은 착각에 빠져서 경제학과가 제일 인기 좋았어요. 경실련 활동은 서경석 목사와 의기투합해서 시작했었어요. 그 친구가 사무총장 맡고, 내가 정책위원장 맡고, 변형윤 선생님 공동대표로 모시고 시작했는데 아주 잘 되더라고요. 경실련 출신으로 출세한 사람들 많지요.

Q. 경실련 활동하시며 제일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셨나요?

A. 경실련이 주장하던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 됐을 때 제일 보람을 느꼈지요. 부동산실거래가격제도를 도입할 때도 그랬구요. 다운사이징이 옛날에는 다 합법이었어요. 요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하면 다운사이징 많이 걸리잖아요. 옛날엔 그게 합법이니까 세금 적게 내려고 모두가 실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지요. 그런데 부동산 실거래가격제도가 실시되어서 등기할 때 제출한 계약서의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나중에 부동산 팔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니 모두 실거래가격을 쓰게 되었지요, 산 가격을 적게 쓰면 거래 차액이 커저서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커지니 모두가 이젠 실거래가격을 쓰게 되었지요. 옛날에는 신고한 거래 가격이 아니라 세무서가 임의로 책정한 매매 가격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지요.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토록 한 것도 경실련의 자랑스러운 공로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옛날에는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6개월마다 이사 다녔어요. 2년으로 늘리자는 경실련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였거든요. 시행 처음에는 집 주인이 2년동안 못 올린다고 2년동안 올라갈 예상 금액을 미리 받으려 하는 바람에 전세금액이 많이 올랐지요. 그래서 경실련이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지만 지금 와서는 다들 잘 했다 그러죠. 만일 지금도 옛날처럼 6개월 마다 세입자들이 쫓겨나서 이사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민단체가 사회의 목탁 역할도 하면서 국민들이 윤리의식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가길 바래요."

Q. 경실련 상근자, 임원, 회원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우리는 경실련을 노래방이라고 했어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노래 부른다고. 회원들은 그런 정신으로 와야 해요. 지돈 내고 지가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거에요. 지가 좋아서 지가 떠들고 싶어서 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회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이고 상근자들에게는 정상생활할 수 있는 생활급을 주어야지요. 저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시민의식을 끌어주는 일들을 계속하면 좋겠어요. 사회의 목탁 역할도 하면서 국민들이 윤리의식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가길 바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많이 부족해요. 역사가 그래요. 조선 후기부터 양심적인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죽고, 일제 강점기 때는 친일파들이 자손대대 잘 살고 독립운동가들은 자손 대대로 가난하고, 해방이후에도 권력과 돈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출세해서 잘 살고 올바른 생각과 뜻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왔지요. 그러다 보니 양심 버리고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야 잘 살고, 양심적으로 살면 본인만 아니라 자식들 고생만 시킨다고 많이들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Q.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A. 하루 놀고 이틀 쉬고 그러고 지내요. 이제는 체력도 옛날과 비교가 안 돼 등산도 잘 못해요. 최근에 책을 하나 냈어요. 『애덤스미스 국부론』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시장은 독과점 기업이 없는 공정한 경쟁시장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에요. 독과점 시장이 아니라 경쟁시장에 맡기라는 거였고, 독과점은 규제하라고 그랬어요. 요즘 시장은 다 독과점 재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경제를 시장에 맡기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재벌에 맡기라고 하는 말과 같지요. 애덤 스미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많아요. 스미스는 아주 양식 있는 사람이에요. 지주들은 생각이 없고, 기업가들은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니 이들의 말은 새겨서 들어야 하고, 노동자들이 잘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썼던 것을 고쳐서 다시 쓴 건데 옛날보다 내 생각을 많이 넣어서 솔직하게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썼어요. 200페이지밖에 안돼서 한 나절이면 읽을 수 있으니 읽어보세요.

경실련과 함께 걷는 길

[회원가입] (FAX) 02-741-8565 (e-mail) member@ccej.or.kr
[전화문의] 회원팀 02-766-5627

회원정보

회비와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
(단체 및 법인명)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원하시면 주민번호 기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우편물 수령지)

가입동기 □추천 (추천인:)
□토론회,행사 (행사명:)
□인터넷, SNS □기타 ( )

회비납부 방식

(CMS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택1)

□ CMS 계좌이체		□ 신용카드	
예금주		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 불가)		카드번호	
출금은행		유효기간	월/ 년(숫자4자리)
생년월일			
출 금 일	□10일 □20일 □25일		

월납부금액

개인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기타( )원

법인 (매월) □5만원 □10만원 □기타( )원
(일시) □60만원 □120만원 □기타( )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회비 수납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 (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자필 필수)

증액 신청서

경실련 회원님, 회비를 증액해 주세요!

이름 **소속**

회비증액 현 회비에서 ( )원 증액합니다.

정보갱신 (변동사항 있는 경우만)

연락처

E-mail

주 소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청일 20 년 월 일

규제를 풀어주면 경제가 풀릴까?

조연성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oakright@gmail.com

대한민국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받아야하는 관공서 도장만 수 십개가 넘는다는 말이 한때 유행이었다. 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 시절 나돌던 이야기로 기억한다. 가깝게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백만 송이 장미 이야기도 규제의 비효율성을 논할 때 자주 등장했다. 규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역사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서 시행한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이다. 당시 마부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 만든 이 법안은 영국의 자동차 산업 발달에 장애물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규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은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 나타나는 사회적 연쇄반응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섞여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개념적으로 정립한 역사적 흐름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관련이 있다. 신자유주의는 크게 영국 수상을 지낸 마가렛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와 같은 시기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으로부터 실행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처리즘(Thatcherism)과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는 노선과 사회다위니즘(Social Darwinism)이 결합한 결과물로 신자유주의는 국가 간 투자와 교역의 완화 그리고 규제 철폐를 전면에 내걸었다.

신자유주의 열풍은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수많은 다국적기업의 외국시장 진출에 대한 이념적 정당화에 기여했다. 더불어 경제와 관련한 국가 통제의 약화를 불러왔다. 이 시기에 성장(development)이라는 결과를 향해 가던 대한민국 역시 정권의 성향을 떠나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결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역설은 의외의 곳에서 등장했다. 자본주의 체제를 뒷받침하던 국제기구 중 하나인 세계은행(World Bank)이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창이던 2004년에 '경제성장을 넘어(Beyond economic growth)'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체적 내용은 결과적으로 자본의 성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경제개발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적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그간 전 세계가 성장(development)을 목적으로 생각했지만 이는 수단

〈단위: 천명〉

		2013 상반기	2013 하반기	2014 상반기	2014 하반기	2015 상반기	2015 하반기	2016 상반기	2016 하반기	2017 상반기	2017 하반기
근로자수	비정규직	5,732	5,946	5,911	6,077	6,012	6,271	6,156	6,444	6,444	6,578
	한시적 근로자	3,331	3,431	3,401	3,508	3,417	3,638	3,577	3,657	3,657	3,725
	기간제	2,594	2,761	2,588	2,749	2,625	2,860	2,810	2,930	2,930	2,930
	시간제 근로	1,757	1,883	1,917	2,032	2,091	2,236	2,222	2,483	2,483	2,663
	비전형 근로	2,208	2,215	2,151	2,112	2,148	2,206	2,138	2,222	2,222	2,112

출처: e-나라지표(www.index.go.kr)

일 뿐이며, 진정한 경제개발의 목적은 웰빙(Well-being)이라고 말한다.

규제를 둘러싼 역사적 논의는 이처럼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부터 규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은 늘 상존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어떠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규제완화로 폐해를 불러온 대표 사례 중 하나는 과거 이자제한법 폐지가 있다. 너무 많은 사회적 부작용 결과 다시 제한되기는 했지만 이자제한이 없던 시절 한국의 서민금융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도 근로조건에 변화를 주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 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3년 비정규직법 자체의 유예를 주장했다. 관련 규제의 완화 움직임 이후 한국 고용시장에서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규제완화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논란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포켓몬 고' 유행 당시 한국은 서비스 예외지역이라 이에 관심을 둔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겪었던 일이 있다. 유사하게 구글 지도 서비스 역시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의 경험담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했다던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모두 정부의 지도반출 금지 규제에 따른 결과다.

이보다 더 첨예한 논란을 불러온 사건은 '우버(Uber)' 서비스 중 하나인 '우버 엑스(Uber X)' 논란이었다. 결과적으로 외국에서와 같은 우버 서비스를 한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적인 동의는 어렵지만 당시 택시조합과의 이해관계 충돌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강경 대응이 우버의 시장 철수를 이끌었다는 분석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

규제완화의 이러한 양가적 측면은 때로는 시민의 선택권 제한이 되기도 하며, 사회적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다. 규제완화가 논란이 되는 경우는 앞선 사례처럼 이해관계의 충돌에 있다. 시장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규제에 대한 찬반양론 역시 뜨겁게 나타난다. 구글 지도는 국내 지도 서비스 기업의 이해가 얽힌 문제이며, 우버는 택시기사의 생계 문제와 직결한다. 이런 문제에서 규제완화는 상황의 개선이나 악화를 동시에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지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규제란 자본의

이해와 상충하는 지점에서 가장 큰 저항에 직면한다. 거대자본은 가급적 정부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확대를 통한 수익 증대를 추구한다. 이 과정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소비자와 사회의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즉, 규제완화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량적 확인이 어렵다. 이에 규제완화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형성된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규제란 시장기회의 소수독점을 막는 예방책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다. 시장이 창출하는 한정적 이익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접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통제국가가 아니라면 이러한 기능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된다. 그럼에도 거대자본이 등장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들은 시장구조를 왜곡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기업들이다. 출발점부터 규모나 자본의 차이에 따라

유리한 고지에서 경쟁을 시작한다. 이들의 무분별한 시장확대는 결과적으로 소규모 자본에 의존한 기업의 고사로 이어진다. 이 점에서 규제에는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물론 모든 규제가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크게 보면 시장이 속한 사회의 안정성과 역사적으로 형성한 가치를 보호하는 데도 규제의 영향이 있다. 문제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규제도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거의 규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영국의 자동차산업 초창기 모습처럼 웃지 못 할 광경이 나타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설정하고 무차별 완화를 시행한바 있다. 시장경제 철학이 없는 무분별한 규제철폐는 결국 소수집단의 이익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촛불정부에서는 이를 거울삼아 경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권창출 1년이 지나도록 고용지표를 포함한 경제관련 성과가 기대치에 부흥하지 못하면서 등장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은행을 산업자본에서 분리하는

규제를 설정한 이면에는 한국 재벌의 무분별한 시장지배력 확대를 제어하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모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명분하에 이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은산분리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중심으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금융산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은산분리를 반대했던 진영도 이러한 점은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기술진보에 따른 사회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내수 규모가 작고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는 중요한 과제다. 경쟁우위가 결국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 노하우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산분리 역시 대의명분에 사로잡힌 불필요한 규제일 수 있다는 점을 무턱대고 부정하기란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에도 은산분리를 포함해서 제도권이 추진하려는 규제완화의 사회적 효과와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규제완화에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한국사회 경제구조의 근본적 왜곡에 있다. 다시 말해 정상 자본주의로 보기 어려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규제완화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회경제 체제가 공정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규제완화 효과가 분산되는 과정을 불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가 성숙해질수록 규제완화가 불러올 효과의 분배를 막연한 구호로 가로

막을 수 없다. 한국사회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형성하면서 소수 몇몇 족벌에 이익이 집중되는 기이한 형태를 오랜 기간 유지해오고 있다. 이들은 갖은 불법비리와 갑질 논란에도 변함없이 공고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며 사회 지배층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시민은 규제완화가 결국 자본의 힘을 등에 없는 소수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사회경제 체제에 대한 불신은 결국 규제완화 효과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된다. 현 정부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규제완화 이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개혁에 대한 피로감인지 제대로 된 개혁이 없었음에 대한 것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재벌과 소수 거대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에 따른 폐단과 시장 부작용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규제완화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민은 금메달을 딴 선수의 병역특례에 대해서도 상대팀이 아마추어라는 점을 들어 지지를 보내지 않을 만큼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논의 자체가 구태의연하다는 것을 이미 시민사회는 간파하고 있다. 이런 시민의식의 성숙도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개발지상주의 시절의 자세를 가지고 규제를 논한다면 결과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결국 순서는 왜곡된 구조의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한 사회라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와 동의가 선행한 후 규제완화가 뒤를 이어야 한다. 단기적 경제성과에 급급하여 근본적 구조를 바로잡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어떠한 규제완화도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없다.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와 별개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와 경제성장 간의 함수에서 현 정부가 경제구조의 정상화라는 변수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현 상황이다. 풀 수 없는 방정식을 대하는 느낌인 든다면 그것은 경제구조 정상화라는 변수를 산입하지 못한 결과다. 시민의식의 성숙만큼 기득권이 가진 사고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확인한 지난 일 년이었다. 규제완화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가 보인다. 촛불이 쥐어준 권력으로서 선행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규제완화 효과란 결국 촛불이 극복하려 했던 집단으로 흘러간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혁신성장을 가장한 은산분리 완화와 규제개악 중단해야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ok@ccej.or.kr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비교하며, 완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대통령 입장 발표가 있은 후, '은산분리'란 단어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1위에 올랐다. 대통령의 주문이 있자, 박근혜 정부 시절 반대를 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완화 법안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을 일부 뜯어 고친 법안을 '규제혁신 5법'이라고 하며,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대상 등 쟁점에 대해 위원들 간 합의가 되지 않아 8월 처리가 불발되자,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정책의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동양그룹 사태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강화시켰던 은산분리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은산분리 원칙이 처음 도입된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이었다. 1954년 이후 은행 민영화 정책으로 조흥, 한국상업, 한국저축(제일은행), 한국흥업기업(한일은행) 등이 소수 기업인들에게 넘어가자 1961년 기업인들의 지분을 환수하면서 금융기관임시조치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10%로 제한하였다. 이후 1982년 개정 은행법에는 동일인 8% 초과금지, 1994년 은행법에는 동일인 4% 초과 금지, 2002년에 와서는 비금융주력자 4% 초과 금지, 동일인 취득한도 10% 초과금지, 2009년 이명박 정부 비금융주력자 9% 초과금지로 은산분리 완화, 2014년 박근혜 정부 비금융주력자 4% 초과 금지 다시 강화로 이어져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행사 가능한 주식을 4%로 강화시켰던 이유는 2013년 동양그룹사태 문제가 컸었다. 동양그룹의 경우 은행은 없었지만, 산업자본 계열사의 부실이 동양증권 등의 금융계열사로 전이되어 그룹전체가 몰락했고 개인주주들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동양그룹에 은행이 있었다면, 국가경제에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 강화를 주문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법안 수정이 되어 다시 강화된 것이다.
은산분리 원칙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재벌과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도 문제이지만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본에 전가 될 수 있는 금융리스크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재벌그룹만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효과는 물론, 정책 추진의 명분과 논리도 없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의 이유로 거론되는 것이 고용창출, 중금리대출 활성화, 핀테크산업 발전 등이다. 하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이후 드러난 통계들을 보면, 아무런 효과도 없음이 증명되었다. 우선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하는 가계신용대출은 고금리를 쓰는 저신용자를 중금리대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1에서 3등급까지의 고신용 차주대출이 96.1%를 차지했다. 돈 떼일 염려가 없는 고신용자들 중심으로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고용창출 또한 은행업 자체가 기술발전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이며, 무점포 형태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 상 고용효과가 있을 리 없다. 실제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의 임직원수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090명이 줄었고,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2018년 3월 말 기준 918명 정도의 고용만이 있었다. 핀테크 산업 발전 역시, 정부는 아무런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알리페이 등은 간편결제 시스템이지 인터넷전문은행과는 무관하다. 결국 은행만 두 개 더 설립한 경쟁효과 정도만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은산분리가 완화되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는 가계부채 관리정책과 모순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달하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한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은 대다수 가계신용대출로 가계부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말로는 가계부채 관리를 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시켜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모순이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대출받은 고신용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여력도 크다.

"제발 우리를 설득해 달라!", "공식적인 토론을 하자!"

경실련은 지난 8월 9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했던 '문재인 정부 은산분리 완화 정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와서 우리를 설득해 달라!"고 했다.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고,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던 문재인 정부가 수십 년간 지켜져 온 중요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면서도 공식적인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 위원 구성을

대다수 은산분리 완화를 찬성하는 의원들로 변경했고, 법안소위까지 찬성론자 중심으로 편성했다. 나아가 나머지 원내교섭단체 2개의 당과 야합하여, 졸속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더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과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의 규제혁신 5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가지 경제정책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그 중 혁신성장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연결시켜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한다며 규제 완화 정책세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을 내세워 법안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5개의 법안은「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안」,「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우선허용 · 사후규제,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한다?

5개의 법안 중「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안」,「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 및 서비스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해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해도 과연 사후적으로 규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정부가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산업에서 사후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여 철수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재벌들과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대상도 모호한 혁신금융서비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내용, 방식, 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을 '혁신금융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회사에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우선 무엇이 혁신금융사업인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 나아가 만약 이 기업들에게 기존 금융규제를 적용시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금융업에 대한 경험과 위험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도 크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인 국민들이 져야 한다.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규제특례

규제혁신 5법은 관계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업을 규제 특례를 통해서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 하에서

국회가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결국 혁신성장이란 이름으로 법치주의까지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을 해야

정부가 혁신성장을 하겠다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인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했다고 하여, 혁신이 일어난다는 발상은 현재의 우리 경제구조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국민들의 안전과 금융건전성, 국가경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자 규제임에도 혁신성장이란 이름으로 훼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해도 재벌들이 탈취해가고 진입장벽 또한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혁신의 기회와 유인은 낮을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땜질식 처방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조금이라도 촛불혁명의 동력이 남아 있을 때,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을 통해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

빅데이터 활성화하면, 국민이 행복해질까?

개인정보 규제 완화, 법령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가 선행돼야 한다.

윤철한 소비자정의센터 팀장
raid1427@ccej.or.kr

지난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기기 규제 완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어 3번째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강조했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연설 대부분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에 초점이 맞췄다. 이날 정부 합동으로 배포한 자료를 보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에 1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세히 보면, 빅데이터센터 및 AI 데이터 전방위 구축, 데이터 구매 · 가공 바우처 지원,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지원,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개인 데이터 활용(MyData) 지원,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빅데이터 융합기술 개발, 빅데이터 전문가 5만 명 양성, 데이터 기업 100개 육성 등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지켜왔던 개인정보 원칙과 법 제도의 근간을 근본으로 흔드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시장, 일종의 브로커 산업을 만들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실명제, 본인 확인 등 개인을 특정하고 추적, 관리하기 최적의 제도를 갖춘 한국에서 금융, 통신, 의료, 쇼핑, 취미 등 사생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산업 활성화란 명분으로 개방하겠다는 무서운 결정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기대하기 힘들다. 개인정보 활용의 '안전'을 위해 법제 정비와 행정 정비가 미진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독립적인 관리 · 감독 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주기 바란다"라는 대통령 연설에서 볼 수 있듯 관계부처에 읍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분산된 개인정보 법령 체계와 행정 감독기구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데이터 기반 산업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유독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강력해서 일까? 정부가 변명거리로 내놓는 정보제공 동의 제도 등 우리의 개인정보 규제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다.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유사 중복 조항의 법간 관계는 모호하다.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부처마다 제각각 이뤄져 왔다. 대통령이 나서 법제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에 서둘러 달라는 발언은 각 부처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성과 전문성을 내세워 반대해온 부처들이 얼마나 쉽게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과 정책들을 만들 시간만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제와 감독기구를 일원화할 시간은 없단 말인가? 이 정부가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는 법체계와 규제기관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혁신이 사라졌다. 부처 간 이견 조율도 되지 않고, 각자 알아서 규제를 풀고 데이터산업 활성화부터 하겠다는 것은 "외양간을 고쳐야겠으니 소를 다 내보내자"라는 그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부가 진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면, 우선 부처 이기주의와 잘못된 시스템을 먼저 바꿔야 한다. 법제 정비와 행정 정비 없는 활용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다. 책임지지도 못할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나쁜 역사로 기억될 뿐이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구분

최예지 사회정책팀장
cyj@ccej.or.kr

정부는 최근 '혁신성장'이라는 깃발을 내세우고 규제완화의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폭주기관차처럼 무조건 전진이다. 국회도 기름을 부어가며 정부와 함께 달리고 있다. 이 폭주를 멈추게 할 자가 없어 보인다.

규제는 사회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반면에 특권을 보장하고 독과점을 보장해주고, 부패로 악용

▲ 사진출처: 연합뉴스

될 수 있는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다.

의료기기만 있지 사람은 없다

'시장진입을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평가하겠다.' 정부가 최근에 의료기기 부분에 대해서도 선(先)허용 후(後)평가를 적용하겠다 밝혔다. 복지부 보도자료에서도 '의료기기 규제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큰의미'라고 내세웠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서는 충격이다. 의료기기를 일단 허용하고 평가 후 규제를 하겠다는 방식은 국민을 임상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밖에 안 보인다. 여기에 사후 평가 이후 퇴출방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불필요한 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을 걷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 뿐 만이 아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서 연구문헌이 부족하면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탈락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혁신의료기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연구문헌이 부족하더라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구문헌이 없다는 것은 효과성이 아직 검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혁신기술의 예로 들고 있는 AI, 3D프린팅, 의료용로봇 등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없는 현실에서, 일단 도입하고 나중에 평가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바로 사람이 빠졌다. 정부는 산업육성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경제성을 따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새로운 기술의 획기적인 도입보다 값싸고,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고, 정확한 걸 원한다. 일련의 과정에서 사람은 배제된 채 오로지 신기술, 의료산업만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쏘아올린 규제완화가 국민에게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의료기술과 기기들의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건강보험 급여가 결정 되도 걱정 안 되도 걱정이다. 급여로 인정되면 예비급여에 해당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용량 통제는 어렵게 되고, 건강보험의 재정의 낭비 뿐 아니라 환자의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비급여가 될 경우에는 관리 체계 밖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사후 평가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리스크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되어있다.

'바이오' 새로운 선수 등장

지난 8월 김동연 장관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은 최대 180일 정도 소요되는 바이오 의약품 원료물질의 반입 등록 · 승인 기간 축소, 바이오시밀러 약가 인상, 복제약 연구개발(R&D)

세제혜택 등 삼성의 규제완화 요구 민원창구로 이용됐다. 이후 삼성은 투자 계획을 밝혔고, 김동연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약가 인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흡사 삼성이 투자 계획을 밝히고, 이에 화답하듯 약가 인상을 검토하겠다며 주고 받는 거래의 모양새다. 심지어 바이오시밀러 약가는 16년 10%p 상한선 인상한지 2년만에 검토하겠다는 2016년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명목으로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오리지널약품 가격의 70%에서 80%로 10%P 인상했다. 바이오시밀러 약가가 이렇게 높은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약가 결정은 기재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이 보험금을 내고 적립한 돈이 특정 산업을 뒷받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름 붓는 국회, 의료영리화 법안의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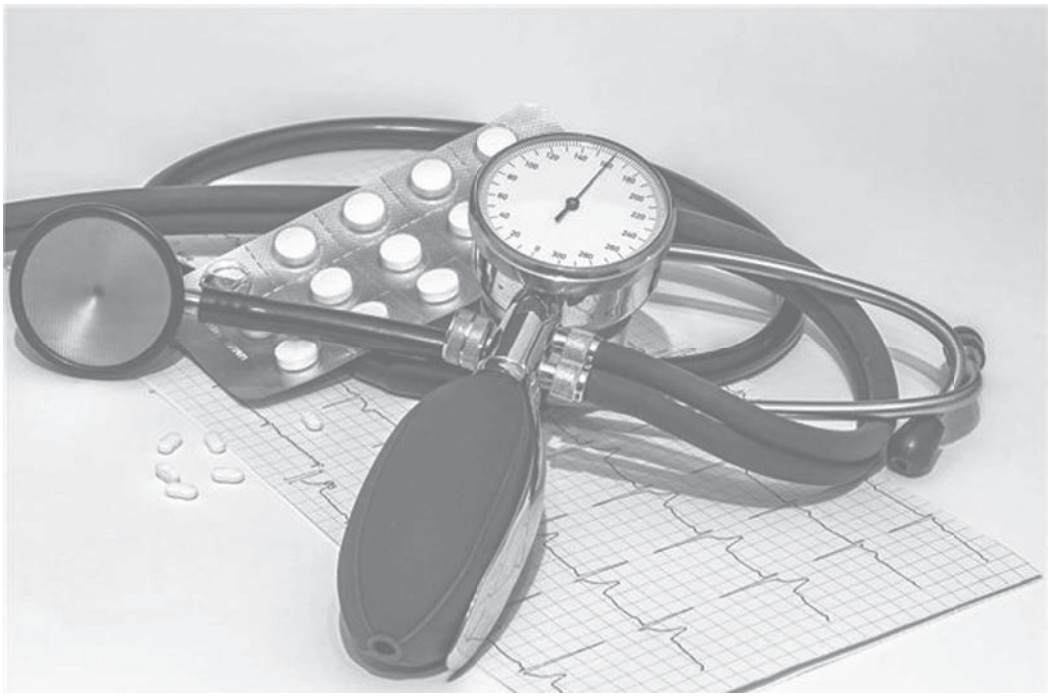
지난 몇 년간 첨예하게 대립하다 없어진 줄 알았던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되돌아 왔다. 이 두 개의 법안이 통과 된다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영리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년 간 반대해왔다. 자세히 살펴보면 규제프리존법은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의료법인이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여당은 시 · 도 조례 대신 대통령으로 개정했으나, 국민에게는 김씨냐 이씨냐 정도의 차이로만 느껴진다. 결국, 규제프리존 안에서는 정하는 사람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혜택을 주고 규제를 없애겠다는 법이다. 여기에 최근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의됐지만, 이것도 논의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꼴이다.

진짜 필요한 규제개혁은 편의점 판매 상비약 확대와 의대정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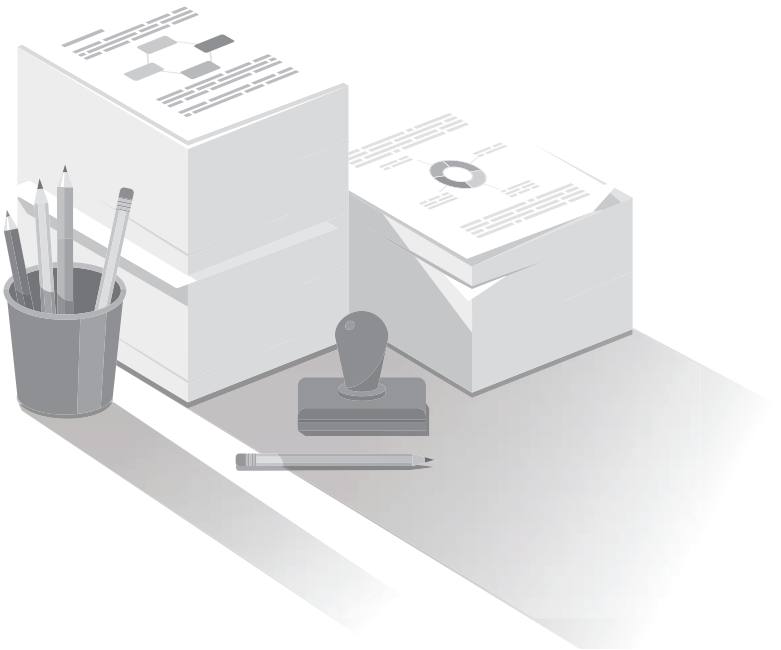
정부와 국회가 서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야 규제완화는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놓고 산업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규제완화의 전형적 예이다. 국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편의성, 자가치료 확대를 위한 없어져야 할 규제들은 놔둔 채, 안전망들만 골라서 없애고 있다.

국민을 위해서 없애야 할 규제는 편의점 판매 상비약 제한과 몇 년 째 그대로인 의대 입학정원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비약은 현재 약사법에는 20개 품목까지 선정할 수 있지만, 도입 시작부터 6년 째 4가지 효능군에 특정제품 13개만 유지되고 있다. 효능군을 확대하여 20개 품목을 모두 지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약사법에 특정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성분명 지정으로 개정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문제의 근본원인은 의료인력 부족이다. 2018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명당 임상 의사수는 2.29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적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도 2030년 의사부족 인원이 7,65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대 입학정원은 2000년 3,273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이다. 또한, 의대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사들의 반대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설립예정인 국립의대의 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정부가 그렇게 원하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의료기기 산업 발전보다 의대입학정원 확대가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판단과 행동에 앞서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구분이다. 지금 목표만 바라보고 주변을 간과한 채 달리는 정부와 국회에게 필요한 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구분이다.



책임 있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 8대 분야 35개 민생 · 개혁과제 발표 –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peace@ccej.or.kr

지난 9월 3일, 2018년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00일간의 회기 동안 여야는 문재인 정부 첫 예산과 국정감사는 물론, 민생 법안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장관과 헌법재판소 소장, 대법관 등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그 동안 국회는 민생 · 개혁입법은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특권유지에만 골몰하여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생 · 개혁입법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돼

또다시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여야는 지난 8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까지 해놓고도 다른 쟁점 법안과의 연계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무산시킨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법안도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야당은 이미 470조5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대립하고 있는 민생 · 개혁법안들은 더욱 험난한 과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국민들의 요구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연일 치솟는 집값,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 불평등의 심화,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불로소득 창궐과 빈부격차 확대 등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여야는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외치지만, 끊임없이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최근 특별활동비 논란과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해외출장에서도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려는 국회의 행태에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민생 · 개혁법안들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민생 · 개혁입법 처리에 사력을 다해야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과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정말로 필요한 법안을 꼭 처리하는 것이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는 협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여당은 협상과 양보를 통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정기국회에 임해야 한다. 산적한 민생 현안과 개혁과제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경실련은 9월 3일 '2018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8대 분야 35개 민생 · 개혁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제시된 정책과제들은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일관되게 주장되어 온 것들로 사회적 합의수준이 높다. 국회는 경실련의 정책과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입법에 적극 나서고,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데 진력해야 한다.

8대 분야 35개의 개혁입법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기존순환출자 해소, MOM Rule 도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② 서민주거안정(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③ 민생안정(둥지내몰림 방지, 적정임금도입, GMO완전표시제, 자동차 교환 · 환불제도 개선 등), ④ 복지강화(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상비약 성분명 지정,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⑤ 권력기관 개혁(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 ⑥ 부정부패 근절(집단소송법, 징벌배상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등), ⑦ 정치/선거제도 개혁(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자금 투명성 · 공정성 확보,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 ⑧ 한반도 평화 구축(4 · 27판문점 선언 비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등)이다

8대 분야 35개의 개혁입법과제, 우리사회 구조 바꾸는 것

먼저,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소유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근본적인 출자구조 제한에 나서야 한다. 또한 공익법인이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상속,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한 MOM(Majority of Minority) Rule의 도입을 통해 황제경영 방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를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토록 상법을 개정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도 방지해야 하고, 관세법을 개정해 재벌위주의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 재벌특혜 제도로 불리는 시내면세점 제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둘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완공 후 분양제를 의무화하고,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실현해야 한다. 집값 폭등이 임대료로 전가돼 전월세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임대료 증액을 2년 이내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건설노동자 착취와 불법하도급을 조장하는 건설산업법을 개정해 공공사업의 직접시공제 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민생안정을 위해 임대료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의 터전이 상실되고 지역 커뮤니티 붕괴 문제가 발생하는 이른바 둥지내몰림(gentrification)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여야가 계약갱신요구기간을 10년의 확대하는데 합의한 만큼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아울러 철거 · 재건축시 퇴거보상 의무화 및 우선입주권 제공과 함께 근거 없는 환산보증금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건전한 일자리 정착을 위해 적정임금을 도입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나서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 건강식품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동차 하자 · 결함시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자동차 교환 · 환불 및 리콜 규정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시급하다.

넷째,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시급한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 및 비용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의 경우도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자가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가능한 상비약을 확대하고, 특점제품이 아닌 성분명으로 상비약을 지정하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취약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개선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 및 병원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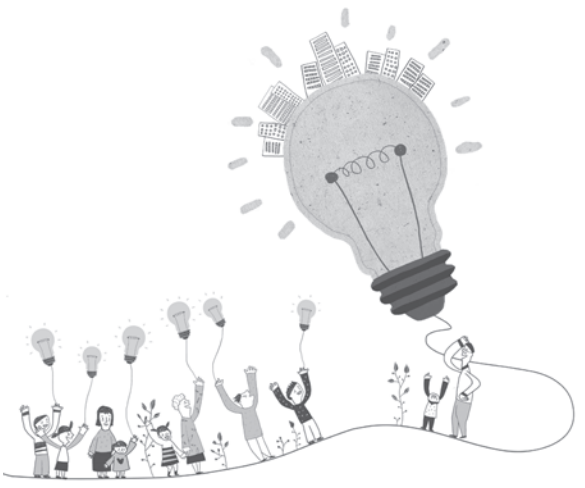
다섯째, 우리 사회 적폐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도 시급하다. 최근 사법농단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나, 법원의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진행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조속히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해 검찰개혁은 물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근절에 나서야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를 분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통해 정치개입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도 시급하다.

여섯째,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8년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더욱 떨어졌다. 부정부패 근절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집단소송법'을 제정해 집단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사법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업이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배상책임을 명확히 묻는 '징벌배상법' 제정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검찰고발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해 정경유착, 법지배의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및 3개 기관 고발요청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영란법 국회 처리과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도 시급하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완전종합과세를 통해 금유소득과 비금융소득의 조세형평성을 강화하고, 상품권의 음성적인 거래 근절을 위해 상품권 발행, 유통, 상환까지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상품권법' 제정에도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부패방지법을 개정해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고,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해 반부패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 정치 · 선거제도 개혁도 중요하다. 비례성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지지율을 의석으로 반영시키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도 필요한데, 우선 정치자금을 인터넷을 통한 상시공개로 바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섭단체에게 유리한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도 개선하고, 수입 ·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출판기념회의 회계내역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이 이루어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그 동안의 인사청문회가 검증부실, 비체계성, 비전문성, 기준 결여 등으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만큼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에도 나서야 한다.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과 선거권 행사를 위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과제다. 남북이 체결한 6 · 15공동선언, 10 · 4선언의 경우 국회비준이 이뤄지지 않아 정권이 바뀌면서 이행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4 · 27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를 통해 남북 합의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 속에서 접촉신고제 완화, 남북교역업체 등록제 전환, 교류협력 전문 지원 · 관리 기구 설치 등을 포함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



〈 2018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 〉

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① **기존 순환출자 해소**(공정거래법 개정)

② **근본적인 출자구조 제한**(공정거래법 개정)

③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개정)

④ **지주회사 전환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상법 개정)

⑤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MOM Rule의 도입**(공정거래법 개정)

⑥ **재벌특혜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관세법 개정)

Ⅱ. 서민주거 안정

⑦ **주택 완공 후 분양제 이행**(주택법 개정)

⑧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주택법 개정)

⑨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⑩ **직접시공제 도입**(건설산업기본법 개정)

Ⅲ. 민생 안정

⑪ **둥지 내몰림 방지**(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⑫ **적정임금 도입**(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⑬ **GMO완전표시제 도입**(식품위생법 · 건강식품법 개정)

⑭ **올바른 자동차 교환 · 환불제도 도입**(자동차 교환 · 환불법 제정)

⑮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보호법 개정)

Ⅳ. 복지 강화

⑯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의료법 개정)

⑰ **안전상비의약품 성분명으로 지정**(약사법 개정)

⑱ **공공의료인력 확충**(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 및 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Ⅴ. 권력기관 개혁

⑲ **사법농단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제정)

⑳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㉑ **검경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

㉒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국가정보원법 개정)

Ⅵ. 부정부패 근절

㉓ **집단소송법 도입**(집단소송법 제정)

㉔ **징벌배상법 도입**(징벌배상법 제정)

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정)

㉖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부패방지법 개정)

㉗ **이해충돌방지법 도입**(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㉘ **금융소득에 대한 완전종합과세**(소득세법 개정)

㉙ **상품권 관리 · 감독 강화**(상품권법 제정)

Ⅶ. 정치/선거제도 개혁

㉚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㉛ **정치자금 투명성 · 공정성 확보**(정치자금법 개정)

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인사청문회법 개정)

㉝ **선거연령 18세 하향**(공직선거법 개정)

Ⅷ. 한반도 평화 구축

㉞ **4 · 27판문점 선언 비준**(국회 비준 동의)

㉟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법

정택수 소비자 · 시민권익팀 간사
wild@ccej.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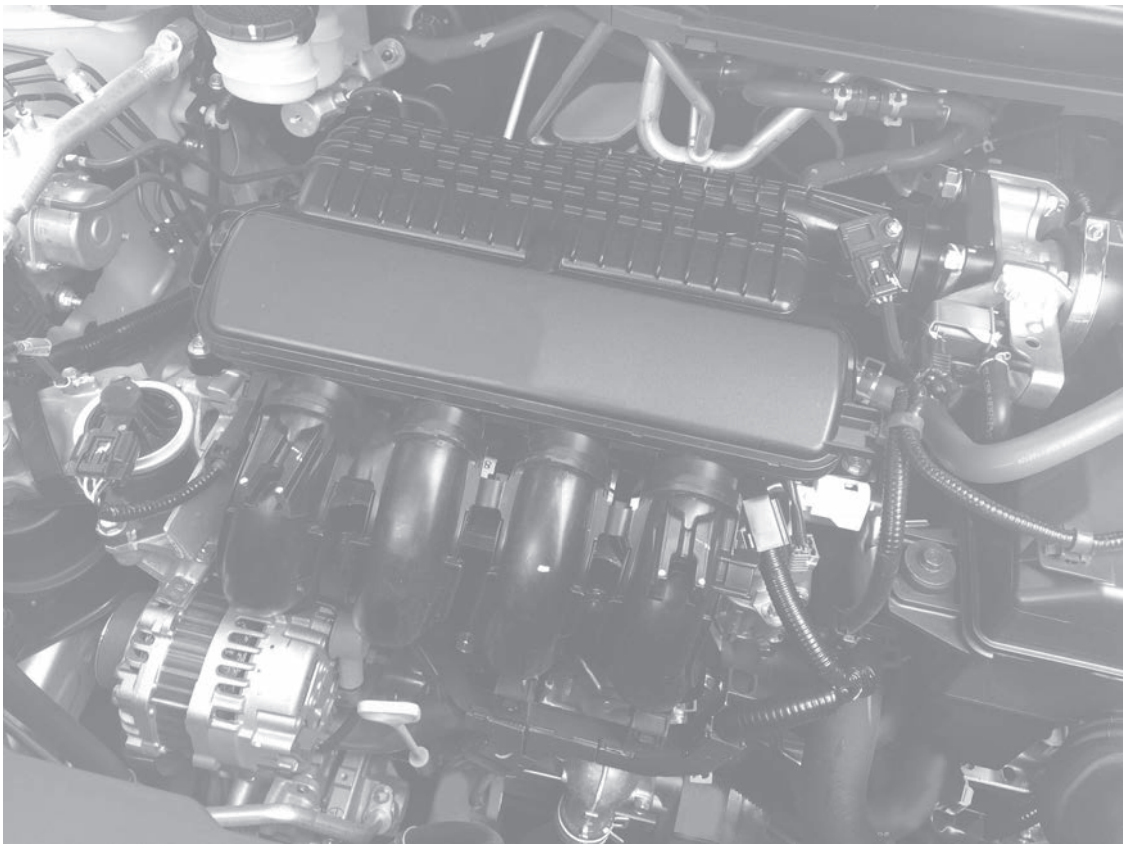
▲ 지난 8월 30일 국회에서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 · 환불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연이은 BMW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나서 운행자제 권고에 이어 운행중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원인 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사태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 ·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까다

로운 요건과 절차, 입증책임, 위원회 공정성,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조차 레몬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BMW 화재 원인과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 제도적 한계를 진단해 보고자 윤관석 의원과 공동주최로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 · 환불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이상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성승환 BMW화재 공동소송 법률대리인,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오길영 교수는 정부가 BMW차주들에게는 적절한 피해구제는 하지 못하고 행정규제까지 내린 반면, 제조사에게는 사태수습을 위한 조치들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뒤늦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하고 사태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모두 사후대처일 뿐이라 비판했다. 자동차는 다른 소비재와는 달리 신체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방지'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길영 교수는 레몬법은 소비자보호법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 목적의 자동차관리법에 삽입하는 것은 법체제의 통일성과 입법 균형을 무시한 처사라 지적했다. 자동차의 영역에 한정해 입법하기보다는, 독립된 개별법으로 입법해 자동차 결함의 경우 이 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가 첫 번째 토론을 맡았다. 성수현 간사에 따르면 자동차안전센터에 매년 수많은 자동차 하자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결함 입증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있는데 자동차 특성상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성수현 간사는 징벌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는 반복적인 결함 발생을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며, 이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을겸 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자동차 교환환불

법이 화재로 확대된다면 많은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자동차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을겸 상무는 화재발생시 제작사들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동차 화재 시 제조사에도 적절한 정보를 통보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기준 부적합 시 자발적인 리콜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성승환 변호사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부품 결함을 사전에 알고도 자동차를 판매하였음에도 주행거리만큼 환불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성승환 변호사는 보상의 주체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니라 소비자여야 하며, 소비자를 중심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자동차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성용 교수는 많은 전문가들이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을 EGR의 바이패스밸브 이상열림에 따른 소프트웨어 결함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BMW사는 EGR쿨러의 냉각수 누수와 침전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화재원인을 고의적으로 축소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하성용 교수는 정부가 BMW 화재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화재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절한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창근 교수는 레몬법이 소비자보호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자의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자동차관리법이 사적 분쟁의 해결, 레몬법의 도입 등 자동차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다룬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제명을 '자동차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집단소송제도까지 함께 패키지로 입법할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며, 패키지 입법이 어렵다면 차라리 행정벌 성질의 과징금을 도입하여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이상일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분석처 석주식 처장이 대신 참석하였다. 석주석 차장은 BMW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밝히며 정부를 믿어줄 것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BMW사태를 중심으로 자동차 결함·하자 사건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점과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정부와 학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경실련은 이 날 토론내용을 토대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절실

김진현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는 수년전부터 시민 소비자단체가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최근에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17년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가 약사회의 자해소동으로 멈춘 이후, 지난 8월 8일 다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상비약 확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전개되었고 최종 결정은

표결로 이루어졌는데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기로 결정되었고 항히스타민제는 부결되었다. 그런데, 회의종료 후에 당초 표결에 불참했던 약계 위원이 추가로 투표하여 화상연고를 다시 부결시켰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표결 결과가 공개된 후 위원장이 회의종료를 선언하였는데 추가투표라는 황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집은 복지부에 대해 경실련은 공식투표 결과(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대로 상비약을 지정하고 하루 속히 7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논쟁을 끝낼 것을 복지부에 촉구하였다.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에 대한 논의는 수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전히 약사회는 국민

6차 〈상비약 심의위원회〉 표결 경과

순서	내용
주요 논의 내용	▣ 복지부 회의자료 ■ 복지부 지사제, 제산제만 확대 지정안으로 상정 ▣ 약계 ■ 효능군 갯수에 상관없이 표결 진행시 투표불참과 강경투쟁 문서로 공개 경고, 타이레놀 500mg 품목 삭제 요구 ▣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 전 회의 안건이었던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 4가지 안건 상정 요구 ■ 약사회의 타이레놀 극약 주장, 상비약 철회요구에 대해 경실련 신현호 위원이 “극약이라면 약사회에서 국민안전을 고려하여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의향이나 논의가 있었는지?” 질문하자, 약계 전인구 위원은 “없다”고 답변
투표 결과	▣ 투표결과 ■ 지사제, 제산제 (찬성6 : 반대0) – 지정 ■ 화상연고 (찬성4 : 반대2) – 지정 ■ 항히스타민제 (찬성2 : 반대4) – 기각 ▣ 위원장, 3개 효능군 확대 선언 후 폐회 선언
불법 투표	▣ 불법투표 (약계 인사만) ■ 복지부 요구대로 약계 위원 2명만 화상연고 효능군 확대여부 항목에 대해서 불법투표 실시 ■ 투표용지 없이 구두로 투표함 ■ 최초 투표결과(4:2)와 추가 투표결과(0:2)를 합산하여 8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하고, 화상연고 효능군 4:4로 기각

불편함이 없다거나 또는 국민건강을 핑계 삼아 약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식의 논리만 반복하고 있고, 복지부는 국민보다는 이익집단의 눈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가 치료의 확대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정책은 단순히 안전성과 편의성, 접근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건경제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함께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야간과 공휴일에 약 구입에 대한 접근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가계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압박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자가 치료의 여건을 확대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는 극히 일부의 오남용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진료비 절감, 시간 절약 등 소비자 선택권과 경제적 편익을 상당히 증진하므로 사소한 위험을 감수하고 막대한 편익을 선택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약의 안전성은 편의점 판매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상비약을 약국에서만 독점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약의 부작용을 부각시켜 반대논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안전하지 않은 약이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사 처방약으로 넘기면 된다. 동일한 약을 약국에서 판매하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면 위험하다는 약사회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어차피 약국에서도 소비자가 달라는 대로 집어주지 않는가. 사회적 상식 수준에서 수용 가능한 위험을 벗어나지 않는 한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약의 안전성은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외국사례와 보편적 기준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나라만의 안전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벼운 증상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해도 된다는 것이 이미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입증된 것이며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편의점 판매용 약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일 뿐, 특정 약품의 부작용이나 이익집단 때문에 왜곡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약국 이익을 위해 소비자가 불편과 고통을 받아야 하나"

휴일과 야간에 약국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약사회는 수년전 심야응급약국(지금은 자율 심야약국)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회피하고 약국 독점을 고수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였다. 심야약국은 병원응급실보다 숫자가 적고 그나마 어디에 있는지 지역주민이 그 위치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경실련은 수년전 심야응급약국을 찾기 위해 약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심야약국을 검색한 후 밤 12시 전후하여 해당 약국을 찾아가보았다. 그 약국을 찾아가는데 꼬박 1시간 이상 걸렸다.

약국 간판이 건물 외벽이나 입구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곳이 빌딩 고층에 위치한 지역 약사회의 사무실이었고,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 쯤 되면 응급약국이 아니라 비밀약국이다. 집 앞의 편의점을 놔두고, 약국의 이익을 위해 심야에 온 국민이 불편과 고통, 시간을 낭비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상비약을 약사 없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합법적 판매행위이다. 2008년 복지부는 소화제와 정장제 등 70여 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을 준비하였으나 이익집단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다. 결국 핵심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복지부의 실천의지이다. 수년전 복지부 장관이 약사회 모임에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반대하는 등 편파적인 행동을 보여 주무장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 상비약 심의위원회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몰상식한 처신도 과거 정부의 사고방식이 아직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화상연고의 편의점 판매를 인정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 의약품 정책의 근간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휴일과 야간의 상비약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공공건설 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최승섭 부동산 · 국책사업감시팀 부장
sub@ccej.or.kr

공공공사의 공사비 부풀림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사비 원가 공개가 9월 1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아파트 분양원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다는 핑계로 9월 중순께 공개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원가도 뷰어파일로만 공개되고, 다운이 불가능해 시민들의 검증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어 당초 원가공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시작단계지만 야심찼던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에 반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경기도 10억이상 공공건설 공사 원가 공개 결정

지난 7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의 SNS계정에 경기도 및 소속기관 건설공사(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원가(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해 왔다. 그러나 성남시가 발주하는 규모가 작다보니 큰 이슈를 끌지는 못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가 원가 공개를 결정하자, 언론과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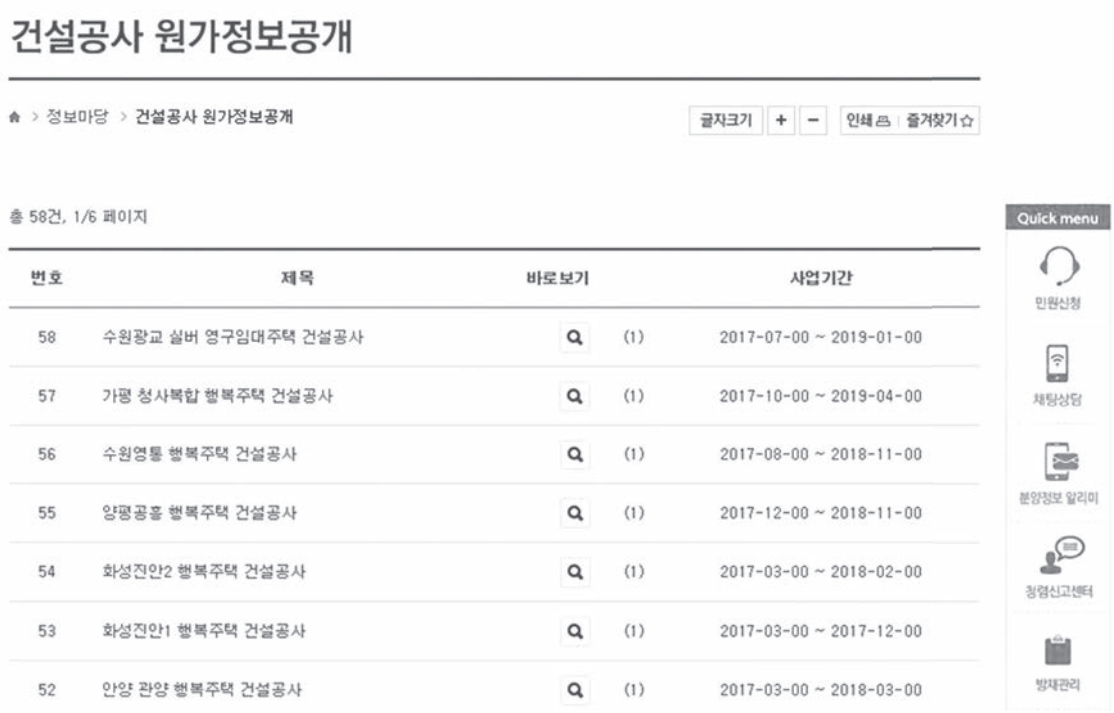
공공사업 공사비내역은 발주자의 예산낭비와 건설사들의 부당이득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보니 철저하게 비공개되어 왔다. 원가공개는 여러 종류가 있다. 설계단계 원가인 설계가, 입찰단계 원가인 예정가격, 원청계약 단계 원가인 공사원가, 하청계약 단계 원가인 시공단가까지 4단계 원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애초 책정되고 낙찰된 공사비가 그대로 공사에 투입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공사비와 관련된 내역서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공사비가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동안 공공사업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결이 있음에도 모든 공공기관들은 공개를 거부했다. 그나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임으로 있었던 성남시가 2016년부터 공개했던 것이 유일하다. 건설사와 공기업 등은 영업비밀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공사의 정보공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판단해왔다. 경실련은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사업에 대한 공사비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법 2008누32425호, SH공사 대법원 항고 포기). 당시 법원은 공사비 내역서가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차 가변적인 조건하에서 어느 정도의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전국의 수분양자들이 LH공사와의 지난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민간참여 아파트 공사비 원가도 투명히 공개해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개를 주저하고 있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실련은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과 '경기도 공사원가 공개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 토의에서 참석자 모두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건설과 임대주택(행복주택, 10년 임대후 분양)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인정했다. 전액 세금으로 진행하고, 공공이 책임을 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 경기도시공사 원가공개 화면 갈무리

문제가 된 부분은 과거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 광교, 동탄2신도시 등의 민간참여형 아파트의 원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일부 관계자는 공동시행사로 참여한 민간 건설사가 공사비와 일부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무조건 공개하기 보다는 법적검토와 당사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맞지만, 행정기관의 권한 내 공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2010두24647), 서울춘천고속도로(2009두14262)의 원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를 대법원까지의 소송을 통해 받아낸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사비내역이 경영 · 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공사비의 명세를 공개한다고 해 업체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간접시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결정한바 있다. 사법부가 민간의 책임과 재량이 훨씬 큰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 공개를 결정한 것에서 나타나듯,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아파트 역시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개혁의 시작이 경기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9월 초 이뤄진 원가공개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이다. 다만 경기도가 이후 다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의 개선을 기대할 수는 있다. 경기도 원가공개로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공사와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보의 은폐가 있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부패청산의 중요한 선언이다. 이 같은 선언이 경기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특히, 시민들이 적폐청산과 개혁을 요구하며 다수의 지자체장으로 선출해준 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적극 나서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라는 명목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LH공사, 국회 등 역시 동조하며 제도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이 정당성과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같이 공공건설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세미나

오세형 경제정책팀 간사
dipsec@ccej.or.kr

▲ 지난 8월 16일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8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슈테판 잠제(Stefan Samse) 한국사무소장과 경실련 4차 산업혁명시민포럼 이광택 좌장(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원동환 경제정의연구소장, 양혁승 4차 산업혁명시민포럼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다. 발제는 이상은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훈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지정토론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맡아서 진행하였다.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금년 초부터 4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사회환경변화를 예측해 보고, 정부 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에 대해 수차례의 내부간담회를 통해 논의해 왔다. 그 중 첫 번째 결과물로 '사회보장과 조세정책 방향'을 이번 1차 공개세미나 주제로 잡았다. 향후에도 두 단체는 한-독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한국과 독일의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합의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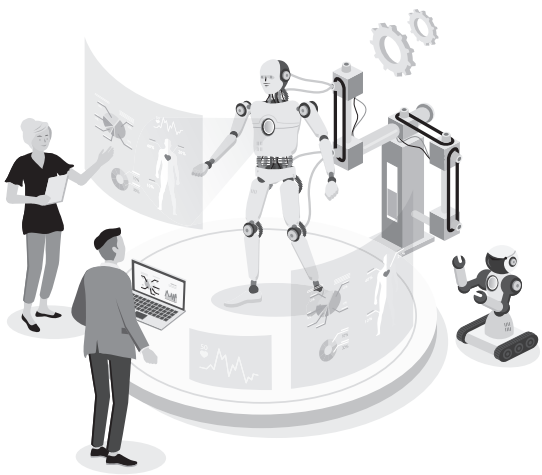
포럼의 공동주최 측인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슈테판 잠제 한국소장은 인사말에서 경실련과 아데나워 재단이 이번 4차산업혁명 세미나를 새로운 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다양한 수당에 대한 시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변혁의 시대에 복지나 세제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들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 원동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은 그 간의 준비과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추가적인 공개 세미나를 거쳐 11월의 국제학술대회까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상에 대해 조금이나마 예측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이란 주제로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가 맡았다. 발제는 첫째, 4차 산업혁명이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가 아니면 강화시키는가? 둘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회보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4차 산업혁명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복지국가 약화론, 강화론, 중립론(현대화론)으로 구분이 되지만, 구체적 양상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의 제도적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노동 중심적 사회보장에서 전국민 사회보장으로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하는 것을 지적했다. 저소득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무급 노동에 대한 보상 등도 중요하다고 했다. 노동과 무관한 사회보장의 확대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세분야 발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노무소득과 자산소득간 조세제도의 차별성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소득격차가 심화될 것인데, 종합소득세 소득구간 및 소득세 세율 변경,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여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로봇세 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로봇에 대한 정의부터 확고히 해야 하며, 로봇을 일정한 설비로 본다면 이미 한국은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디지털 경제 확대로 인해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했다. 공유경제도 소득과세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최영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바라는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술변화와 고용유연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노동중심구조에 탈피하여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안전성 제공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의 토대는 결국 행복과 경제적 안정성에 있다는 측면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승영 연구위원은 로봇세와 기본소득간의 관계를 검토했다. 로봇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설비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는 로봇세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정 수준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생산시설 및 설비체계를 분리하여 법제에 담아 과세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실업에 대한 공적부조의 재원마련 측면이 강조된 기본소득제고 방안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디지털 경제체제하의 공유경제 발전에 대한 언급도 했다.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수행되는 경우의 사업장(NEXUS)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혜택을 보던 체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민선 7기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의 역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4232950@hanmail.net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민선 7기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혹독했다. 경실련이 선거 다음날인 지난 6월 14일 마련한 평가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 하나같이 "대선이 치러진지 1년이 조금 지난 허니문 기간"에 "남북관계 등 굵직한 의제에 압도당할 수밖에"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풀뿌리가 실종된 지방선거"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당 공약은 "문재인"과 "적폐청산"이 전부였다고 혹평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약 및 인물 검증으로 인한 후유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후보가 치른 선거가 아니었다는 거다.

좀 더 현실로 다가서면 '여대야소(與大野小)'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지방의회를 만난다.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라는 거다.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로 알려진 인천만 보더라도 8대 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33개 전 의석을 석권한 가운데 야당에 양보한 건 비례대표뿐이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에 각각 한 석이다. 2006년 5대 의회를, 한나라당이 30개 전 의석을 석권하고 열린우리당이 비례대표 한 석의 고배를 마셨을 때와 똑같다. 당시 지방정부와 의회는 한통속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다 결국 인천시민에게 재정위기를 안겨줬다. 현 시정부와 의회가 반면교사 할 대목이다.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 셀프 조례 발의

민선 7기 시정부는 물론 8대 시의회도 적폐를 청산하고 당선된 장본인이란 자부심이 대단하다. 하지만 그들에게 벌써부터 적폐의 싹이 보이니 걱정이다. 자신을 시민단체 출신 몫의 비례대표로 천거하는데 기반 역할을 한 소속단체가 영구적으로 위탁사업을 수행하게끔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거다. 그는 한때 여성 노동운동의 상징이었고, 민주화운동 선배들이 모여 있는 '인천민주화계승사업회'와 이 회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서 중책을 맡아온 인물이다. 민선 5기 때 정치성향이 같은 시장 아래서 혈세로 운영하는 센터를 만들 더니, 이젠 영구운영 체제를 구축하려는지 스스로 조례를 발의한 거다.

민주화운동 물을 먹었다는 의원이 이 정도인데, 다른 의원은 어찌 평가해야 할까? 결국 정당 구분 없이 특정 정당으로의 쏠림은 문제라는 거다. 그동안 경실련이 주장해온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절실한 이유다. 현행 비례대표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해 앞선 사례와 같은 정치상황이 벌어지면 대책이 없는 거다. 인물 검증을 가로막는 낙하산 공천의 폐해를 해소하려면 소수정당 및 지역정당이 활성화돼야 한다. 정당법에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 광역시 · 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 · 도당으로 구성한다(3조)' '정당은 5개 이상의 시 · 도당을 가져야 한다(17조)' '시 · 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18조)'고 돼있어 진입장벽이 높다. 거대 정당의 지방정치 독식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거다.

시민사회의 정치개혁 · 지방분권 운동 절실

어디 이뿐이겠는가. 많은 정치개혁 과제가 제안됐지만 누가 고양이(공천권자)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느냐다. 결국 경실련 등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당장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20% 이상 떨어진 지지율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거다. 전략상 개헌과 지방분권 논의를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의지만 있다면 권한의 이양은 현 체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그렇다. 다만 지역경실련 모두 자기 지역의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요구해야 한다는 거다.

지방분권의 토양이 구축되면 동량지재(棟梁之材)가 자라나고 지역공동체에서 일꾼으로 쓸 수밖에 없다. 검증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역정당이 활성화된 일본과 독일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럼 당장은 어찌할 건가. 시민사회가 의회를 대신해 지방정부를, 시민을 대신해 의회를 견제 · 감시해야 한다. 더불어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정치개혁과 지방분권을 요구할 때다. 마치 촛불민심의 대변자인양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만들어진 지금의 지방정부와 의회가 국민과 시민에게 실망을 안기면 그 후폭풍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거다. 경실련 가족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회원인터뷰]

“사회적으로 받은 상처는 사회적으로 바로 잡혔을 때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i78@ccej.or.kr

2년 반 일하고, 12년 2개월을 싸운 KTX 해고승무원들의 눈물의 복직 기사 많이들 보셨지요? 지난 7월 21일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해고 승무원 18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난하고 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이들이 있어 그래도 이렇게나마 해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이 경실련 회원이라는 사실이 번쩍 떠올라 축하도 드리고, 그간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 등도 회원들과 나누면 좋겠다 싶어 회원인터뷰를 요청 드렸는데 흔쾌히 만나주셨습니다.

“아직도 서울역 가서 농성해야 할 것 같고,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아요”
인터뷰를 위해 철도노조 사무실이 있는 용산역 인근 카페에서 만난 김승하 회원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만큼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김승하 회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지난 9월 4일 용산역 인근에서 만난 김승하 회원

Q. 먼저 다시 한 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랜 기간 애 많이 쓰셨어요. 복직합의 소식 이후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A.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전 본사 가서 면접 볼 예정이고요, 적성검사 시험도 봐야 되고, 서류 떼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 부산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러 많이 다녔고 다니고 있어요. 지난 8월 22일에는 'KTX 해고승무원 직접고용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문화제를 했었어요. 감사드려야 되는 분들 초대해서 다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니까 다 같이 만나서 감사인사도 드리고 이번에 복직대상 되는 사람들 거의 120명 정도 모였었어요, 그동안 못 본지 몇 년 된 사람들 얼굴도 보고, 저희가 한꺼번에 복직하는 게 아니라 33명 먼저 복직하고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티오가 나는 대로 순서대로 복직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얼굴 보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겠다 싶어 행사를 마련했어요. 사실 좀 정신없이 얼레벌레 지나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이번 달은 조금 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Q. 첫 출근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A. 아직 배치가 안 돼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아마 10월이나 11월 돼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입사전형 준비 하고 있어요. 신체검사도 받아야 되구요.

Q. 이제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사임하시는 건가요?

A. 아 이제 KTX 열차승무지부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각 역으로 발령을 따로 받게 돼요. 우선 이번에 합의한 것 중 승무 업무는 논의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 논의가 완료되면 전환배치 하겠다는 걸 약속했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 대부분 역무직으로 가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열차승무

지부는 완전히 사라지고 각 역에 속하게 되면 역 지부의 조합원이 되는 거죠.

Q. 이번 채용은 특별채용인가요? 정규직으로 복귀하시는 거죠? 이번에 복직이 결정된 180명 전원 복직하시는 건가요?

A. 경력직 채용으로 특별채용이긴 한데, 거의 신입 사원 채용하는 것처럼 다시 모든 전형을 그대로 보는 거죠. 전체 정리해고 된 인원은 290명이었고, 소송에 참여하신 분이 180명이었어요. 처음에는 끝까지 투쟁한 33명만 복직해준다고 했었는데 협상 끝에 소송에 참여한 180명 모두 복직하게 됐죠.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거 맞구요. 근데 거의 신입이라 사실 고민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 복직을 안 하는 분들도 3명 정도 되고요. 가끔씩 저희 기사보고 댓글다시는 것 보면 그냥 그 시간에 다른데 가서 취업을 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은 취업을 했거든요.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이후에 활동을 한다든지 휴가를 내고 활동을 한다든지, 집회에 나선다던지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직장을 다닌 지 벌써 10년이 되어가는 거죠. 이미 과장급이 된 친구들은 이번에 복직하면 월급이 지금보다 반 토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 초봉, 신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자리 잡은 친구들은 많은 걸 포기하고 복직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 일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지금 직장 조건이 더 좋아도 그만두고 복직하겠다는 거죠.

Q. 이번 KTX 사태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A.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저는 사실 IMF를 잘 모르고 지나갔지만, 그 IMF 때 파견법이 생겼잖아요. KTX 승무원이 처음으로 계약직 자회사로 파견되어있는 그런 형태로 고용을 할 수 있었던 게 우선은 IMF때 법제가 바뀌면서 그런 근거가 마련 된 거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를 외치게 되고 글로벌한 세계화 이런 것들에 경쟁하지 않아야 하는 것 까지도 무한경쟁 체제로 도입을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기업 경영을 잘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철도도 자회사에 사람을 주게 되면 이것이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지출되면서 철도공사 경영평가도 높게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서도 여성들만 뽑혔던 건 기본적으로 철도공사의 마인드 자체가 스튜어디스, 예쁠 때 잠깐 쓰고 버리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 승무원들을 여성으로, 팀장이랑 남자 승무원들은 놔두면서 여성 승무원들만 비정규직에다가 자회사 이런 고용 구조로 서슴없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배경 하에서 여성 차별 문제까지. 그리고 모든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평가를 잘 받게 되면 연말에 성과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철도공사 안에서 자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겼는데 고위직이 퇴직을 하면 그 사람들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수단으로써 자회사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Q.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제일 큰 피해자중 하나이신데,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문제도 사실은 양승태 사법부의 그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아마 해결 안됐을 거예요. 그게 핵심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풀린 문제이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다른 사법농단의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쌍용차도 그중에 하나고. 전교조도 그렇고. 그런 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회의 체계가 있어요. 그쪽에서 계획이 닿는 대로 활동도 하고 또 지금 국회 안에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시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계속 참여할 생각이에요.

쌍용차 문제는 제발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 더운 날, 지난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바닥에 누우면 익을 정도로 뜨거운데 그걸 또 하신다 하셔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만약에 저 같아도 만약에 저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나 같아도 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 심정이 이해가가요. 아무리 덥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들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활동을,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법농단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건 분명히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책임, 철저한 수사, 수사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까지 다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활동을 할 생각이에요. 돌아가신 한 분을 위해서도 저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Q. 앞으로 승무업무 전환 배치 및 직접고용 등 과제가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조금 더 설명해주신다면?

A 저희가 싸웠던 목적이 승무업무를 직접고용 시켜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었고 다들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뭔가 이번이 해결될 수 있는 그나마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합의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고 개운하지 못하고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영화 헝거게임 보셨어요?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있어서 가난한 동네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을 시키면서 1등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부자 동네에서 살게 해주는 건데 주인공이 이런 구조에 저항하고 이런 체제가 잘못됐다 하면서 다 같이 싸워나가는 이야기에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헝거게임에서 을끼리 싸우게 만든 구조를 바꾼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중에서 1등을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부자동네에서 1등을 한 사람은 너네들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 너네들 서로 죽고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야 애네들 해결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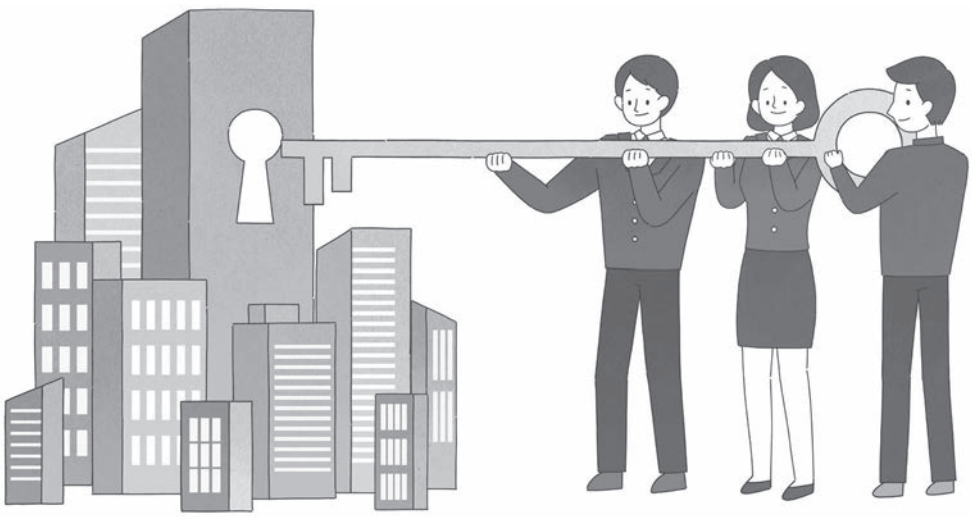
거 봤잖아. 마치 우리 문제가 그 사람들이 시혜를 베풀어서 풀린 그런 케이스로 홍보가 되는 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 씁쓸했어요.

Q. 경실련 회원 인터뷰로 요청 드린 건데, 경실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A. 저희가 기자회견 하면 시민단체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경실련도 그렇구요. 그러면서 인연이 돼서 가입을 하게 됐어요. 아직 제가 많은 걸 알지 못하는데 경실련 소식지는 잘 보고 있어요. 덕분에 지식이 쌓이는 느낌이랄까. 뭔가 뉴스를 잘 챙겨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경제 관련해서 경제라고 하면 숫자, 머리 아프고 굳이 뭐 찾아봐야 되나 하면서 좀 멀리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사실은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은 그래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죠.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철도노조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런 계획도 하지 말고 그냥 현재에만 충실하고 그냥 쉬라고. 근데 그 말이 제일 위로가 되고 너무 좋았어요. 다른 분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노동계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막 그러시는데 이제 뭐 사실 저도 지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지고 KTX 열차승무지부가 없어지면서 다른 지부 조합원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제일 기뻐요. 이제 지부장 끝! 우리가 남은 미션도 분명히 있지만 이건 장기적인 미션인거고요. 우선 지금 당장은 좀 끝났으니 쉬어. 그런다고



사실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마음이 풀어지지 못한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심리상담 같은 걸 할 계획이있어요. 뭔가 하나하나 아직도 쌍용자동차 이런 것 때문에도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뛰어들었지만 정말 십몇 년 동안 왜 너네 그러고 있니. 그거 안 되는 거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그걸 붙잡고 있는 게 바보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쨌든 풀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던 비난들,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됐으니까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려면 사회적으로 받은 상처는 사회적으로 바로 잡혔을 때 이게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출근을 하고 너희들이 싸워서 뭔가 됐어 라는 식으로 위로도 사람들한테 많이 받고 그래야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아직은 조금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며 지내려고 합니다.

복직 소식을 듣고 마냥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김승하 회원을 직접 만나 뵙고 나니 좋은 일이라 다행이기도 하지만 한편 무거운 마음과 여러 고민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일단 잘 쉬고,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원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사회 희망의 씨앗이 되는 사건을 만들고 계시니 큰 힘이 됩니다.

현장에서 회원과 함께 정의를 세우자

제1차 경실련 아카데미를 다녀와서...

노건형 지역지원팀장
infocore@ccej.or.kr

일정이 이상하다?

지난 8월 20일(월)부터 2박 3일 동안 '경실련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본래는 매년 2월과 8월에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부터 8월 중앙위원회를 대신하여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니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이번 아카데미가 '상근활동가 중심이

아닌, 상근활동가와 임원분들을 중심으로 계획했는데 왜 평일(월,화,수)에 2박 3일로 진행하나?' 하고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초에는 '대전 KT인재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다 도중에 장소가 변경됨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평일 일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또는 1박만 하고 중간에 돌아가신 중앙 및 지역의 임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지면으로나마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장소는 좋았다.

처음, 아카데미 장소를 답사와서 들은 느낌은 주변 풍경은 좋은데 시설이 약간 낡았다는 이미지와 주변에 편의점 등이 없고 시설 내 매점이 일찍 폐점한다는 점에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총평가시 의외로 장소가 상당히 좋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경실련 가족들 중에 혹 대전에 방문하실 분들을 위하여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명칭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뿌리공원, 효문화마을, 효월드' 등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시면 야경이 좋다는 평가가 많고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수달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뿌리공원'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서 뿌리는 나무뿌리가 아닌 족보를 의미합니다.

이후 여기에 효라는 컨텐츠를 더해 효문화마을과 족보박물관을 조성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이 효월드입니다. 족보박물관은 한 번쯤 구경해볼만 합니다. 대전 안영 IC에서 나오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특이한 것이 버스를 타면 효월드 입구가 아닌 효월드 내 건물 바로 앞에서 내려줍니다. 아마도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그런 가 봅니다.

프로그램???

처음 시도를 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어수선하기도 하고 틀도 생각보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조직도를 보시면 경실련 아카데미가 하나의 조직기구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근활동가 및 임원, 회원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권역별 전국 상근자 간담회'를 2달에 걸쳐 진행해 왔는데, 의외로 상근활동가와 임원교육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근활동가의 경우 실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경실련 운동에 대한 교육을, 임원과 회원의 경우 경실련 운동과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임원교육을 진행하고 사무총장에게 경실련 운동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큰 주제를 '회원'으로 잡았습니다. 몇몇 지역경실련의 경우 오래전부터 회원을 기반으로 한 조직을 만드는데 힘써왔으나 중앙경실련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의 경우 회원 또는

회비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성공 또는 실패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목표로 삼아 계획을 했습니다.

회원을 주제로 한 다양한 토론들

첫째 날은 상근자들을 연차별로 나눠 주제 없이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별도로 첫 째 날부터 참여하신 임원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도 별도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초 계획은 임원분들의 경우 둘째 날부터 참석을 유도키로 의도하였지만 사실 지역에서 상근자와 임원분들이 따로 행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둘째 날의 임원토론의 내용과 첫째 날의 임원토론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프로그램의 조정, 상근활동가와 임원분들의 최초부터 별도의 프로그램 진행 또는 날짜 선정 고려 등 내년에 진행할 때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을 시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 내용들을 돌아보면 상대적으로 회원기반이 탄탄한 지역을 겉으로 보기에는 회원조직(모임)도 있고 회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해당 지역경실련의 상근활동가 역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무엇을 결론 내는 자리는 아니였지만 대체로 회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은 공감은 하나, 회원조직을 만드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점과 무엇보다 회원조직 또는 프로그램을 경실련 활동과의 연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상근활동가와 임원분들의 토론시 이구동성으로 회원확대를 위해서는 회원프로그램이나 회원조직보다는 경실련 활동의 매스컴 노출이 상당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활밀착형 또는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에서 처음으로 토크쇼 형태로 진행한 '리얼 토크쇼'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은 상근활동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 막힘없이 진행이 되었고, 상근활동가로서의 고민에 대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외부강사가 아닌 현장에서 경실련 운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자리는 계속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좋았던 점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이번 아카데미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소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고, 상근자들이 나와 북콘서트처럼 진행한 '리얼 토크쇼'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예전에는 지역별로 흩어지지 않게 숙소를 배정했는데,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상근자들을 모두 섞어서 방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활동가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의 교육도 좋았지만 숙소에서 술 한잔하면서 선, 후배 활동가의 경험과 사례들을 공유한 것이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방배정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최초에는 예전과 같이 지역별 안배를 했습니다만, 총장께서 임원분들은 몰라도 상근자들은 전부 나누라는 지령을 하달하셨습니다. 이에 고민하기 싫어하는 기획팀 최윤석간사께서 그냥 가나다순으로 배치, 그에 따른 결과가 이번 방배정의 흑막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더듬어 보세요. 함께 하신 그분들의 성씨가 나와 같거나 비슷한 성씨일 것입니다. 왜냐, 뿌리공원이니까요.....

나빴던 점

단점으로 많은 분들이 부실한 식사를 지적하셨습니다. 뿌리공원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에 식대가 높지 않은 식사가 제공된다는 점과 인근에 식당이 많지 않았던 점이 주요했습니다. 향후 진행시는 이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빡빡한 일정과 중간에 붕뜬 상근활동가들의 시간배분이 지적됐습니다.

시간배분의 경우 상근활동가와 임원의 분리 교육 등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빡빡한 일정의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카데미를 핑계로 1년에 전체상근자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중앙위원회의 경우 지역활동가들은 임원분들을 챙기느라 여유가 없으며, 가끔씩 하는 전국실국처장회의 또는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회의 경우 사무국처장들 대상이므로 전체 상근자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1년에 공식적으로 딱 한 번 있는 아카데미가 교육 외에도 친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제를 심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

물론, 아카데미는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교육을 받는 자리이며, 오히려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역경실련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 이후 의정모니터링에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에 중앙경실련 지역팀에서는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2월 중앙위원회에서는 전국 공통사업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국 공통사업이 단순히 중앙에서 제안하고 통과되는 사업이 아닌 전국 경실련이 작더라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화동이야기]

“경제적 지원보다 기초 예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배우 강신일)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i78@ccej.or.kr

▲ 지난 9월 11일 동숭교회 카페에츠에서 인터뷰 중인 배우 강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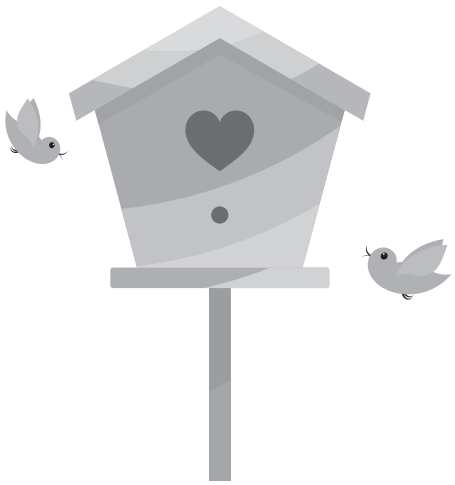
경실련 사무실이 있는 대학로는 연극의 메카, 문화예술의 거리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 이전부터 연극배우나 극단 관계자를 인터뷰해서 궁금증을 풀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번 호에 싣게 되었습니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중인 의병활동을 다룬 드라마에서 고종황제의 강직한 충신으로

출연중이신 강신일 배우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11일 동숭교회 카페에서 강신일 배우를 만나 대학로 이야기,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Q. 선생님도 대학로 연우무대라는 극단에서 연기를 처음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대학로는 연극인, 배우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 인가요?

A. 대학로가 처음에 이런 거리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옮겨가면서 이쪽에 처음 예총회관이 생기고 문예회관 대소극장이 생기면서 처음 문화의 뿌리를 내리게 됐죠.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로에 그렇게 극장이 많지 않았어요. 문예회관 대소극장, 샘터 파랑새극장, 바탕골소극장 정도가 있었고 신촌 쪽에도 조금 있고 적은 수였지만 분산돼 있었는데 80년대 후반에 연우무대가 혜화동로터리에 터를 잡으면서 몇 년 상간으로 소극장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누가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극장이 늘어나다 보니 대학로가 문화의 거리가 됐고, 연극의 중심지같이 됐죠. 아주 자연스럽게요.

극장과 극단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신인배우들이나 신생극단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다보니 연극인들한테는 연극작업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Q.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들이 치솟는 임대료와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진다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극단들이 많이 어려워진 건가요? 다양한 공연생태계인 대학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A. 어려운 것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과 비례해서 연극인들이라고 해서 어떤 혜택을 받거나 그런 대접을 받지는 않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연극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극장 갯수와 극단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렇

▲ 배우 강신일은 77년부터 동숭교회에 다녔는데 그 때 조그만 촌극을 시작으로 연극을 경험했고 자연스럽게 연극의 길을 걷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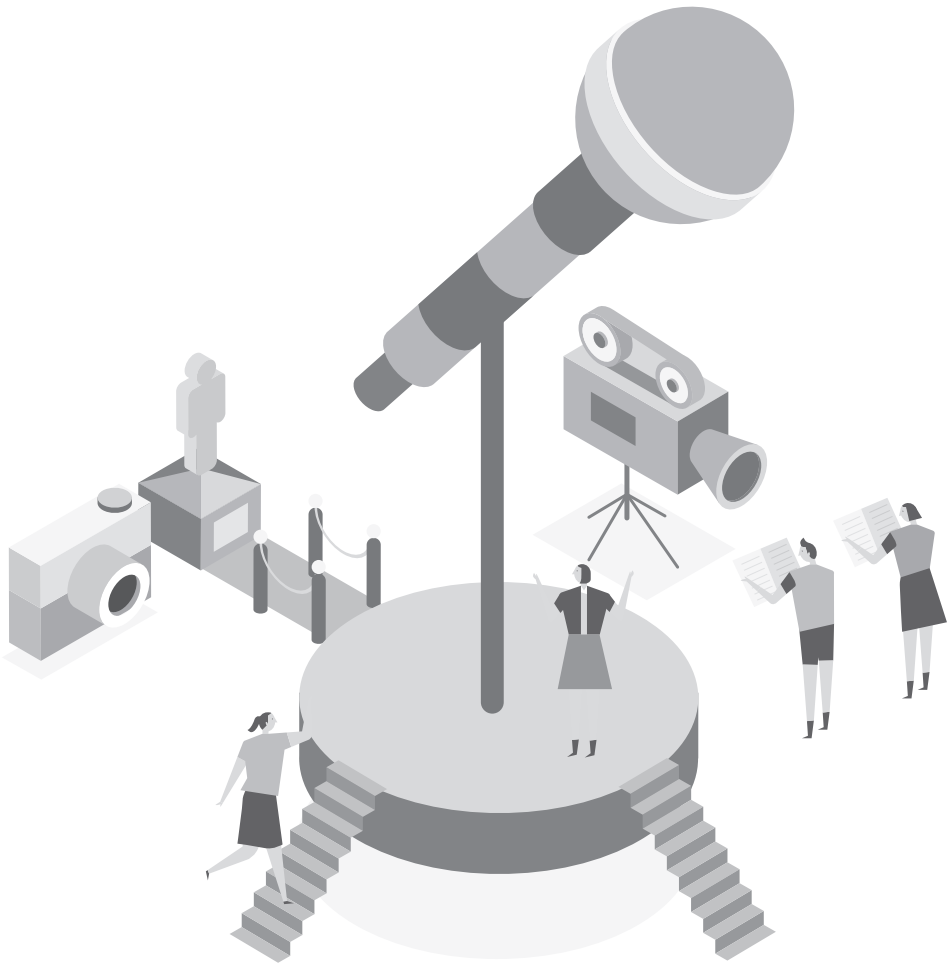
다고 해서 연극 환경이 더 나아졌다고는 할 수 없고, 지금이 뭐 특별히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그렇네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했었으니까.

저도 어떤 해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본주의 사회지만 기초 예술, 기초 스포츠 분야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들은 필요한 거 같아요. 스포츠 같은 경우는 달리기, 트랙 종목 등이 있을 테고, 기초 예술로는 연극과 무용처럼 사실 관객들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찾아가는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공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국민들이 의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돈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식의 변화가 진정한 문화의 토대가 된다고 봅니다.

Q.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공개돼 파장이 컸는데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그건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77년 연우무대가 창단되면서 당시에 극단이 많지는 않았지만 다들 번역극들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연우무대는 우리 것을 우리 식으로 연극을 만들어서 관객들과 만나자는 취지로 계속 창작극만 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체제비판이나 사회비판 같은 내용들의 연극들이 자주 등장했어요. 그 시절까지만 해도 공연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 중앙정부나 정보과 형사들이 연우무대를 늘 주시하고 있었죠.

제가 연우에 들어갔을 때에도 항상 그랬었어요. 근데 전 재미있었어요. 그 시절에 남들은 잘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작품을 통해 했고, 어쨌든 연극을 통해 투쟁을 하겠다는 거는 좋은 연극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연극, 예술로서 완성도를 높이려 애쓰는 작업들을 해왔었죠.

그 시절에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제약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편한 시선을 받아가면서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군인 출신들은 아니잖아요. 민주사회에서 군사정권에서나 할 법한 행동들을 했으니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대학로의 많은 연극인들이 끝없는 투쟁을 이어갔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릴레이로 작품을 올리기도 하는 걸 보며 아직 정신은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Q. 의병활동을 다룬 드라마에서 고종황제의 최측근으로 의롭고 강직한 충신 역할을 맡아 열연중이신데, 이정문 대감은 어떤 사람이고, 연기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시나요?

A. 사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그 역할이 무슨

▲ 올해 말에는 '락앤롤', 내년 1–2월에는 '레드' 작품에 출연할 예정이다.

일을 하고 앞으로 전개되면서 어디까지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워낙 촬영 시작할 때부터 논란도 많았고 관심도 많이 받았던 작품이라 젊은 배우들 중심일거라고만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었죠.

그냥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는 대감, 그것만으로 비춰지진 않았으면 했어요. 꼭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것이 드라마에서 잘 보여 지기는 어렵겠지만 마음은 그랬어요. 이 사람도 한 나라의 대신으로 결국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자기 살길을 찾아간 그 길이 나중에는 독립운동과 연결이 됐을 뿐, 애초부터 나는 정의의 편이야 그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정문 대감은 친러파라기보다는 그때 외세에 흔들리고 있는 대한제국에서 그나마 대한제국이 덜 상처받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러시아쪽이 아니겠느냐 판단한 거지, 친일파처럼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종의 대한제국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Q. 지금 출연중이신 드라마는 곧 종영할 텐데 준비중인 차기작이 있으신지,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A. 후속으로 들어가는 작품은 있는데 회차가 많진 않아 바쁘진 않아요. 금년 말 내년 초에는 연극을 하려고 해요. 당장 다다음주부터는 연습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연극하면서 다른 드라마나 영화

작업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립영화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작품을 제안한 게 있는데, 독립영화는 기회가 되면 늘 하고 싶은 장르라 연극과 병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다 하고 싶어요.

연말에 하는 건 국립극단에서 제작하는 '락앤롤'이라는 연극이고, 내년 1-2월에는 자유소극장에서 극단 신시가 레파토리 형식으로 계속 해왔던 '레드'라는 작품에 출연합니다.

Q. 경실련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문화예술인으로 시민단체 경실련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경실련은 알고 있었어요.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은 있고 마음에 뜻은 있으나 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인데 이렇게 경실련이라는 단체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고 하시니 멋지고 고맙지요.

감히 제가 무슨 말씀을... 그냥 산다는 게 참 힘들다는 걸 자꾸 느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건 진짜 아무도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이 참 두렵고 변화하는 건 좋은데 변질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제 스스로에 대해 충고합니다. 내가 처음 연극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의도와 어떤 정신을 가졌었던가 요즘 들어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모습에서 얼만 큼 멀어졌나 아니면 가까이 있나 아직도 그렇게 연극을 하고 싶은 건가. 내 삶도 인생도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하셨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매체에서 뵐 때도 진중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는데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니 더 좋았습니다. 안면인식장애 비슷하게 낯가림 하신다며 시종일관 겸손하게 인터뷰에 임해주신 모습도 고마웠습니다. 연극무대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고, 연륜이 묻어나는 그의 연기가 그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 곁에서 계속 멋진 문화예술인으로 남아주시길 응원합니다.

영화 〈공작〉에 그려진 분단시대 왜곡된 우리 정치현실

– 분단시대, 정보기관은 누구를 위해 봉사해왔나

서휘원 정치사법팀 간사
hwseo88@ccej.or.kr

[사진출처–영화 공작, 제작 영화사 월광/사나이픽쳐스, 배급 CJ 엔터테인먼트]

1. 들어가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언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시계는 여전히 1990년대에서 머물러 있는 것만 같다. 남북관계의 시계는 똑-딱-똑-딱- 느리게 흘러간다. 그런데 느리게 흐르는 것은 비단, 남북관계만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시계는 우리의 정치도 느리게 흐르도록 만들어왔다. 선거 때면 붉어져 나오는 '북풍', 국정원(안기부)의 선거 개입 등이 선거 논리를 바꾸었고, 선거가 아닌 시기에는 빨갱이, 이념 공세 등이 국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시계는 흐르고 있다. 늦지만, 큰, 그런 변화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2018년 8월 8일 개봉한, 영화 공작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이다. 안기부에서 일했던 공작원, 박채석의 기록에서 분단시대 왜곡된 우리의 정치를 돌이켜 보도록 하자.

2. 영화 〈공작〉 포스터

들어가기에 앞서, 영화 〈공작〉의 포스터를 보자. 흑색 배경의 포스터의 중간에는, 2018년 8월 8일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냉전의 1990년대, 남북을 뒤흔든 그들의 선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그리고 네 명의 인물이 서 있다. 좌에 있는 인물은 안기부 실장 최학성이 있다. 그는 안경을 썼고, 한 쪽 눈썹을 치켜 올렸고, 한 손은 주머니에, 다른 한손은 그의 부하 직원의 어깨에 올려져있다. 그가 정보기관에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인 업무를 자처하고 있으며, 명령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에 있는 인물은 북한 보위부 소속의 정무택이다. 그는 북한 보위부 소속의 옷을 입고 있고,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턱은 치켜 들고 있다. 그가 '조직'에 충성하지만, 거만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포스터의 중간에 있는 인물은 북의 고위 권력층인 리명운이 있다. 그에게서 권위적인 아우라가 느껴지기 보다는 다소 슬픈 기력이 느껴진다. 그리고 포스터 중간에 의자에 앉아 있는 인물이 바로 박석영이다. 그도 역시 안경을 쓰고 있고, 그에게서 표정을 읽기란 어렵다.

그리고 포스터 제일 밑에는 "공작(工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글씨는 조각나 흐릿하게 처리되어져 있다. – 분단시대,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북풍과 같은 정치공작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해왔다. 이러한 정치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것일까?

3. 영화의 줄거리

영화 〈공작〉은 분단의 시대 속에서 지난(至難)했던 남북관계를 보여준다. 이 영화의 타임라인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남북 관계가 북핵 이슈로 전쟁 직전의 긴장감으로 치 달았던 시기부터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시기까지이다. 남북은 해빙의 무드 속에서조차도, 체제 보장을 위한 생존의 정치를 이어나갔다. 1993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에 반발하여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해버린다. 미국은 북한과 핵 협상을 시작하여 1994년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 합의서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능력 동결을 목적으로 한 핵금지 조약 잔류가 이루어져 북핵 문제는 일

단락되는 듯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했다.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 첫 출항이 있었고, 2000년 6월 15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6 · 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남북은 이산가족상봉과 경제 협력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또 다시 2003년 1월 1일, 북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네 차례에 걸친 북핵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2005년 9월 19일,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등을 담은 9 · 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영화사에서 제공하는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993년,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다. 정보사 소령 출신으로 안기부에 스카우트된 박석영은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핵의 실체를 캐기 위해 북의 고위층 내부로 잠입하라는 지령을 받는다. 안기부 해외실장 최학성과 대통령 외에는 가족조차도 그의 실체를 모르는 가운데 대북사업가로 위장해 베이징 주재 북 고위간부 리명운에게 접근한 흑금성. 그는 수년에 걸친 공작 끝에, 리명운과 두터운 신의를 쌓고 그를 통해서, 북한 권력층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1997년. 남의 대선 직전에 흑금성은 남과 북의 수뇌부 사이 은밀한 거래를 감지한다. 조국을 위해 굳은 신념으로 모든 것을 걸고 공작을 수행했던 그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에 휩싸이는데…"

4. 공작에 그려진 한반도의 정치 현실

먼저, 영화 〈공작〉은 분단의 시대에 놓여있는 남과 북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남과 북은 이미 빛바래진 냉전의 최전선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하여 시작된 동서 냉전은 1989년 베를린 장벽붕괴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 들었다. 물론, 이후에도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중국도 첩보활동을 해왔다지만, 분단된 남과 북은 냉전의 최전선에 섰다. 이는 남과 북의 "체제"를 위한, 혹은 정권유지를 위한 이념 공작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영화 〈공작〉은 분단의 시대에서 왜곡된 우리 정치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분단시대에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반공주의에 힘입어 세력을 유지하는 기득권과 그 정권을 위해 봉사해왔다. 아울러, 1987년 민주화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87년 민주화의

1) 1993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에 반발하여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해버린다. 미국은 북한과 핵 협상을 시작하여 1994년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 합의서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능력 동결을 목적으로 한 핵금지 조약 잔류가 이루어져 북핵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했다.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 첫 출항이 있었고, 2000년 6월 15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6 · 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남북은 이산가족상봉과 경제 협력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또 다시 2003년 1월 1일, 북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네 차례에 걸친 북핵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2005년 9월 19일,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등을 담은 9 · 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사진출처–영화 공작, 제작 영화사 월광/사나이픽쳐스, 배급 CJ 엔터테인먼트]

목표는 대통령 직선제의 쟁취와 이를 통한 민주정부의 수립이었다. 이른바 선거혁명을 꿈 꿨다. 이 과정에서 선거 이외의 민주제도에는 관심을 소홀히 했다. 국가 안보의 미명 아래 권위주의 체제에 봉사해왔던 기무사, 안기부 등의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이후 지금까지도, 정보기관(안기부, 국정원)에 의한 선거개입 의혹이 붉어져 나오고 있다. 분단체제에서 정보기관이 불가피한 것일지라도, 이러한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여 공작을 펼쳐대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다.

5.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먼저, 구시대의 체제의 논리를 다시 생각하자. 요즘, 87년 체제라는 말이 유행이다. 우리가 민주화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진정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87년 체제를 살고 있지 않다. 1948년 국가보안법 체제의 영향력이 87년 민주화 체제를 압도해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정보기관과 정치권력에 의해 용공조작으로 몰려,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징역형을 살고 있다.

둘째, 분단시대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공작을 경계하자. 흔히 한국사회에서 진보는 남북관계에서 유화적 입장을, 보수는 남북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고들 한다. 그랬기에 북한의 무력 도발, 북핵위기 등이 터질 때면, 국민들의 정서는 보수에 기울었다. 국민들은 정치권력 기관의 개입을 경계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제는 정보기관에 의한 북풍, 정치공작이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민주화 이후에도 기무사의 계엄령(위수령) 검토, 정보기관의 선거개입 등이 붉어져 나와 우리를 분노케 하고, 때론 허망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더 이상 정보기관이, 군이 분단체제의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선거에 개입하고, 계엄령을 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대신에, 정보기관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국제 관계에서 정보 활동에 국한된 그들만의 업무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말로 신념 있는 정보기관의 직원들이 온갖 회의와 자존감의 상실 속에서 조직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6. 나가며

영화 속에서 박석영은 안기부의 선거개입 사태에서 안기부가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첩보, 보안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수준을 벗어나 조직의 보존을 위해 북한의 무력대응과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공작 업무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국가 안보가 아닌, 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안기부를 나오며, 다음과 같이 되 뇌였다. 그의 말이 아직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자아내고 있다.

“나는 왜 공작원이 되었을까? 무엇을 위해 싸워온 것일까?”

홈페이지, SNS를 통해 올라온
시민들의 의견에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

SNS에서 많이 본 이슈

▣ '쌈짓돈'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내년부터 영수증 증빙을 통해 투명화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폐지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 이러한 눈속임에 질타를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국회는 의장단 몫을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특수활동비도 전부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은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여 금융의 건전성을 지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완화하는 것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는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합니다.

▣ 재벌의 보유세 특혜를 알아봅시다?!

이태원에 위치한 이건희 회장 주택의 시세는 무려 497억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261억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로 혜택을 보는 보유세는 자그마치 1억 7천만원입니다. 이곳 외에도 재벌들이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지가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공시지가를 바로잡아 재벌에게 주는 세금 특혜를 없애야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news@ccej.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cejustce
전화번호 02-766-5627~5628

Homepage Twitter Facebook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2018. 07

07.24
- 국민연금공단은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주식대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유엔 2018 고위급정치포럼(HLPF)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 채택을 환영한다

07.25
- GMO 공인검사 현황 분석결과
-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07.26
- 종부세 개편으로 35개 재벌빌딩에서만 연 780억 특혜

07.27
- 피감 · 산하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하라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사업 원가공개 환영한다.

07.30
-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약사회의 이기주의
- 공정거래법 보고서는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땜질 방안에 불과

07.31
-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라

2018. 08

08.01
-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08.02
- 국회는 20대 초반기 특수활동비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08.03
- 청와대와 정부는 'GMO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 'BMW 화재' 원인규명을 넘어 자동차 법 · 제도 개혁하자

담벼 규탄 기자회견]

08.06
- 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분양가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 개선하라
- 유엔의 핵군축 고위급회담 개최 및 핵폐기 조치를 위한 청원서명 진행
- 문재인정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평가 토론회

08.07
- 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 ·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 6 · 1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 공약평가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통령 사과 1년 평가 및 제안 기자회견
-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하자
-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품목 확대 "필요하다" 의견 압도적

08.09
- 문재인 정부 은산분리 완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수입 대두 비의도적 GMO 혼입치 0.12% 불과
- '쌈짓돈'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08.13
-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환영한다
-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

08.14
-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환영, 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 공사 원가를 공개하라
- 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08.16
- 민주평통 특활비 폐지가 아닌 조직해체가 답이다
-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하라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08.20
-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08.22
-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08.27
- 박원순 시장 여의도 · 용산개발 전면보류 아닌 전면 철회하라
-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은산분리 완화 등'금융규제 완화 3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

08.28
-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관련 국회 공개 질의
-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8.27대책은 개발확대에 기댄 투기조장책이다
- 100조원 불로소득 발생시키고도 반성없는 진희선 서울부시장 경질하라

08.29
- 박근혜정부가 시작한 민자사업 특혜정책,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나
-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08.30
-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 자격 없어
-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주려는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 · 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08.31
- 여야는 상가법과 재벌규제완화법 패키지 처리 철회하라!
-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2018. 09

09.03
- 8대 분야 35개 정기국회 개혁과제 발표
- 원가공개에 저항하는 관료가 누구인가

09.04
-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09.05
- 집권여당 대표의 무책임한 공급확대, 강력히 규탄한다
- 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 효과의 일방적 주장말고 관련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 의미 있지만 혁신적이지 않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09.06
- 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각 정당 대표 공개질의
-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모색 공청회

09.07
- 2018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7대 소비자정책" 제안
-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 건축비, 실제보다 26% 비싸
- 국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09.10
- 중앙정부(LH공사), 서울시(SH공사)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09.11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 문재인 정부 조직운영 · 혁신방안 평가토론회
- 문재인 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 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09.12
-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09.13
- 복지부가 결과 뒤집은 안전상비약 6차 심의위, '자료 없다'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서라
-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 어떤 경우에도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라!

09.14
-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용 대책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신입회원 70명, 가입일 2018년 7월 21일~2018년 9월 14일)

MLBkiz군산점	기영식	김순이	김정숙(2)	박경숙	박성준	박종열	신영희	오세형	이정희	조민정	최재민
강연희	김광수	김연규	김주환	박노수	박성진	백완근	안경옥	유승분	이창민	주춘식	한효준
강유심	김근성	김영호	김학무	박복숙	박세복	선근우	안옥희	윤재현	이창안(철우스님)	차성수	홍신아
고경호	김명주	김응하	김효정	박상훈	박연정	성인제	안희철	윤천준	이혜란	최미선	황유민
공경율	김미영	김일한	남화선	박새봄	박연호	송윤	양수장	이상미	전무수	최성은	
곽 도	김성동	김재식	노광진	박선애	박장헌	송호석	양영순	이정희	정우석	최연태	

중앙경실련	고지숙	권준기	김긍태	김병각	김성칠	김완배	김재구	김준배	김태수	김호경	대성운수	박기영	박성호
	공병욱	권준석	김기숙	김병구	김성태	김완욱	김재길	김준식	김태수	김호경	라윤흠	박기철	박성훈
강대수	공양석	권준우	김기열	김병수	김성필	김용남	김재성	김준영	김태승	김호균	류도암	박기훈	박세권
강덕순	공정표	권찬	김기태	김병수	김세준	김용섭	김재열	김준호	김태진	김호성	류시문	박남규	박세원
강두현	공진하	권철민	김기환	김병수	김세진	김용숙	김재일	김지연	김태헌	김호식	류중렬	박노건	박세증
강마야	곽기훈	권혁근	김길락	김병재	김소라	김용술	김재하	김지영	김태현	김호연	류지성	박달현	박세현
강명구	곽새별	권혁민	김남덕	김병주	김송식	김용식	김재홍	김진경	김태형	김홍규	류형욱	박동렬	박수행
강민구	곽의영	김갑수	김남수	김병주	김수영	김용재	김재화	김진구	김태형	김홍업	류화근	박두영	박순기
강병철	곽지웅	김건일	김남훈	김병학	김숙희	김용철	김재환	김진만	김태호	김효선	마경화	박명환	박승배
강선미	곽효석	김건호	김대균	김병호	김순득	김용하	김정국	김진명	김태호	김효원	마미영	박미나	박승상
강성중	곽희남	김경낙	김대선	김보경	김승보	김우비	김정돈	김진섭	김태훈	김희연	맹경숙	박미라	박승욱
강영권	구경이	김경모	김대성	김보라미	김승우	김우영	김정민	김진수	김태훈	김희철	맹성렬	박미선	박승준
강은현	구성찬	김경민	김대중	김복환	김승하	김원석	김정석	김진아	김평진	나권일	문경식	박민수	박승진
강일환	구수정	김경배	김대진	김봉진	김승현	김원재	김정수	김진현	김필관	나기열	문광기	박민준	박시근
강주현	구은경	김경생	김대현	김사길	김시연	김원태	김정욱	김진화	김학수	나병현	문상준	박민진	박양제
강창걸	구자범	김경수	김대호	김삼칠	김시원	김유룡	김정원	김진효	김한나	나순팔	문석진	박병오	박영규
강창구	구찬회	김경수	김대훈	김상겸	김양규	김유진	김정현	김찬동	김해성	나일주	문세영	박병옥	박영규
강창균	권경무	김경아	김동영	김상균	김양수	김유찬	김정호	김찬석	김헌동	나준희	문소상	박병일	박영기
강철	권기대	김경준	김동우	김상덕	김양진	김유환	김정호	김찬형	김현석	남기원	문인섭	박보성	박영남
강철규	권기범	김경철	김동율	김상영	김연규	김윤기	김정호	김찬호	김현성	남상권	문장협	박삼종	박영민
강철승	권동현	김경호	김동호	김상우	김영미	김윤두	김정훈	김창균	김현수	남상욱	문차호	박삼희	박영민
강태철	권득용	김경환	김래관	김생수	김영섭	김윤석	김제후	김창범	김현정	남원호	문태현	박상대	박영수
강현신	권만열	김관영	김만기	김서현	김영순	김윤섭	김종근	김창선	김현정	남재걸	문현국	박상렬	박영웅
강혜정	권봉철	김관용	김만수	김석환	김영실	김융	김종덕	김창식	김현철	남현주	문현정	박상성	박영철
경규현	권상헌	김광배	김명균	김선욱	김영은	김은경	김종록	김채윤	김현희	남호원	민남미	박상인	박영환
경민수	권순식	김광수	김명임	김선필	김영재	김은경	김종목	김천	김형규	노건형	민병욱	박상현	박영훈
계충미	권순용	김광훈	김명철	김선희	김영주	김은섭	김종민	김철	김형균	노법영	민수영	박상현	박용석
고강석	권순탁	김국주	김명호	김성균	김영준	김은영	김종배	김철주	김형조	노상헌	민희숙	박상형	박용정
고경일	권순호	김규범	김명환	김성달	김영준	김인곤	김종찬	김철호	김형준	노연경	박건영	박석순	박용제
고성순	권영준	김규영	김무준	김성민	김영철	김인봉	김종혁	김철홍	김형진	노우성	박경서	박석현	박용준
고영일	권영진	김규흔	김문환	김성수	김영철	김인숙	김주규	김철환	김형표	노재원	박경숙	박선규	박우석
고영회	권오진	김근성	김미진	김성수	(일허스님)	김인영	김주묵	김충환	김혜경	노재훈	박경준	박선희	박원규
고욥	권용습	김근수	김민수	김성수	김영출	김인철	김주영	김충효	김혜숙	노정호	박광태	박성배	박원석
고은주	권용희	김근철	김민연	김성욱	김예은	김인태	김주종	김치수	김혜순	노진주	박광헌	박성용	박윤수
고은진	권윤정	김근초	김민정	김성일	김오열	김일수	김주현	김태균	김호	노창수	박근호	박성정	박은아
고지석	권일민	김금숙	김민주	김성종	김완래	김재구	김준	김태균	김호	노희철	박기서	박성혁	박은현

박응순 박후근 내셔널 신동조 양광회 원혜영 윤재석 이동석 이순한 이정희 임명호 전상용 정제용 조준형
박의용 박훈 선종국 신두철 양대규 유경희 윤정섭 이동엽 이승근 이종규 임상혁 전상욱 정종원 조진만
박인선 박희령 설원식 신봉기 양동호 유관영 윤종길 이동주 이승대 이종길 임서구 전성철 정주연 조진수
박인수 박희선 설창인 신봉진 양두석 유기천 윤종빈 이동한 이승섭 이종민 임세은 전영진 정준수 조진오
박재갑 박희연 성광식 신상준 양석영 유기청 윤종호 이동호 이승우 이종수 임영환 전용배 정중식 조철제
박재익 반영철 성금성 신상진 양성범 유기현 윤중식 이만호 이시연 이종열 임용기 전용일 정진민 조현성
박재천 방상윤 성병화 신선철 양세영 유남식 윤지원 이명진 이신호 이종윤 임웅찬 전우영 정진우 조현익
박점수 방정혜 성신 신영철 양수장 유덕열 윤진철 이명천 이애화 이종창 임장원 정경옥 정창률 조형준
박정민 방종수 성외경 신영철 양연식 유동진 윤창원 이명훈 이연재 이종희 임재환 정광화 정창운 주상희
박정석 방효창 성욱진 신완기 양용배 유동호 윤철한 이모세 이영란 이주하 임정규 정덕임 정태근 주인권
박정식 배동준 성윤숙 신용준 양원표 유록수 윤한필 이봉숙 이영범 이준모 임종필 정동영 정태명 주정운
박제화 배병달 성인제 신우현 양유정 유명진 윤현식 이봉형 이영음 이준영 임청빈 정만중 정태성 지동섭
박종국 배영환 소경섭 신은정 양윤숙 유병서 윤효상 이봉훈 이영호 이지영 임태영 정명채 정태완 지동익
박종근 배유아 소진성 신인철 양인준 유송 음유정 이삼열 이용곤 이지훈 장경완 정병오 정택수 지영근
박종선 배은경 손건일 신정무 양창우 유승중 이갑수 이상룡 이용배 이진경 장권 정병철 정필성 지영석
박종소 배인명 손경익 신지영 양채열 유연삼 이갑수 이상범 이용선 이진영 장동민 정삼룡 정하용 지정희
박종열 배장수 손기훈 신철영 양태훈 유인상 이강운 이상복 이용승 이진원 장두호 정상미 정혁제 진영수
박종우 배종석 손무길 신현호 양혁승 유인환 이건호 이상봉 이운향 이찬영 장문호 정석원 정혜승 진원석
박종원 배천호 손봉호 심동준 엄원종 유일용 이경락 이상엽 이원관 이창안(철 장미은 정석희 정혜승 진유식
박종원 배흥진 손상석 심영숙 엄청나 유재경 이경수 이상엽 이원식 우스님) 장병호 정선철 정회성 진중화
박주은 백경아 손성국 심인석 여수정 유재민 이경숙 이상우 이원재 이창엽 장보름 정선혜 정희창 차상열
박준수 백요한 손성일 심정환 여해경 유재욱 이경우 이상윤 이원재 이창효 장석림 정성남 조강훈 차은상
박중철 백정숙 손세욱 심진섭 염규석 유재혁 이경종 이상윤 이원희 이창희 장석춘 정성봉 조강희 차진구
박지원 백종무 손승태 심충진 염진형 유종성 이경태 이상은 이윤규 이철우 장성현 정세진 조건영 채대영
박지혜 백진현 손재운 심혜정 예병렬 유진상 이경필 이상진 이윤배 이춘수 장승진 정세훈 조경민 채민성
박지환 변동철 손정근 아름다운 오경준 유평준 이광섭 이상진 이윤상 이충현 장심영 정승상 조광현 채예정
박진순 변동훈 손종보 한익원 오길영 유해신 이광열 이상철 이윤선 이태용 장영식 정승준 조광희 채원호
박진아 변상해 손호중 안경숙 오상엽 유향임 이광택 이상희 이윤호 이태진 장영오 정승화 조규홍 채준하
박진호 변수원 손희준 안규창 오상준 유혜영 이광필 이석규 이은재 이하인 장영환 정연섭 조병익 채홍석
박진홍 변재근 송기민 안기정 오세정 유호림 이광현 이석기 이의영 이학수 장욱 정연욱 조성하 천민승
박창욱 변창우 송다겸 안병억 오세형 유호성 이규철 이석범 이인영 이학용 장원택 정영욱 조성희 천병우
박창임 봉흥선 송덕원 안병준 오세호 유희동 이규혜 이석제 이일권 이한길 장유리 정왕규 조성훈 천세완
박철수 서경호 송미영 안영훈 오순택 유희숙 이균성 이석진 이재걸 이한민 장은미 정용수 조성희 최광규
박철주 서순탁 송병록 안완용 오승훈 윤견수 이근식 이선신 이재길 이한범 장일진 정용화 조순열 최광용
박춘건 서영덕 송병주 안용식 오용식 윤경숙 이근조 이성구 이재옥 이행섭 장재영 정운수 조순홍 최광현
박춘호 서완석 송수영 안인화 오장환 윤득구 이근태 이성근 이재완 이현미 장중철 정원철 조승환 최근현
박치우 서윤석 송연미 안재경 오정균 윤명 이금희 이성민 이재운 이현재 장찬홍 정원희 조연성 최기환
박태선 서은경 송용석 안정혜 오제명 윤상균 이기송 이성복 이재은 이형세 장철기 정윤영 조연정 최다니엘
박태순 서정일 송원기 안종범 오종현 윤석호 이기우 이성형 이재임 이형일 장형환 정윤채 조용기 최덕천
박태영 서정화 송인섭 안종한 오창훈 윤숙자 이기웅 이소영 이정규 이혜숙 장혜령 정의호 조은호 최덕호
박한용 서종대 송인윤 안지현 오현석 윤순철 이기호 이송수 이정남 이호경 장홍석 정익훈 조일흠 최명희
박해원 서종철 송인철 안진걸 오현철 윤여림 이낙원 이수연 이정성 이호섭 장희곤 정인호 조재연 최병철
박행우 서직원 송재경 안철원 오희택 윤영곤 이남경 이수영 이정행 이호욱 전대홍 정일용 조재호 최석준
박현진 서한송이 송하동 안현구 우호식 윤영천 이다혜 이수인(이주원) 이정현 이화주 전병순 정임식 조정근 최성수
박형근 석기영 송하복 안효정 원동환 윤은선 이대열 이숙희 이정호 이훈 전병식 정재영 조종운 최성주
박혜란 석철수 신동민 안희숙 원영진 윤은주 이대영 이순기 이정후 이희중 전봉양 정재은 조종철 최성현
박호걸 선동수 신동애 안희정 원제환 윤인오 이덕영 이순배 이정훈 인치숭 전봉진 정재진 조주희 최수만
박화영 선우인터 신동엽 안희철 원종호 윤일성 이덕희 이순용 이정희 임건묵 전상룡 정정래 조준범 최수진

최수진 한국산업 홍창기 황은경 배웅규 **시민** 김민식 장인석 박운남 최순희 김원용 손진일 전기풍 김가연
최승섭 폐자원공 화강윤 황정호 서민호 **권익센터** 김병조 장형원 박인재 최승룡 김잠이 송오성 정보건 김경태
최승우 제조합 황경복 서순탁 김삼수 전귀정 반태연 최우헌 김점수 신미경 정석윤 김경표
최연태 한국생산 황광열 **도시** 신행숙 김강준 김성호 전미옥 배정순 최종문 김종태 신미애 정선우 김경화
최영식 성본부 황기명 **개혁센터** 심재민 김상헌 김용현 전영선 서은주 한동준 김종현 신부연 조승재 김기영
최예지 한상윤 황민호 심준신 김석기 김은수 정동욱 송문길 한살림강 김철관 신용호 조오현 김남권
최온아 한상일 황선영 고일두 양우현 김영미 김일한 정승훈 송민석 릉생활협 김청집 신찬숙 조치경 김남현
최원영 한상훈 황선용 공병준 오세형 김태경 김장철 정창현 송재석 동조합 김충곤 심재국 조하영 김남희
최원천 한석웅 황선원 곽도 윤재용 김태룡 김재기 조광환 신미영 홍용표 김판열 안미나 진성우 김다솜
최유영 한선아 황영미 곽충삼 이동근 김택성 김재원 주석부 신승춘 홍진원 김판희 양끝선 진휘재 김동범
최윤재 한성철 황유경 권영진 이만희 김현아 김정웅 최우진 심규만 김필성 엄수훈 최삼주 김동진
최은진 한승구 황이남 권일 이명수 나태균 김정진 최평규 심윤보 **거제경실련** 김한기 여남권 최선종 김미란
최은철 한승호 황이숙 김경희 이민석 대호관세 김정현 최호창 심재상 김현호 여정애 최운용 김민재
최인숙 한승호 황인구 김광만 이병준 사법인 김종구 추재훈 심헌섭 강경수 김호일 염경수 최윤숙 김민주
최인호 한연하 황인선 김금옥 이상협 박병식 김주호 한광수 양창훈 강병주 나기석 오성관 한은진 김봉섭
최일 한영관 황정국 김기성 이양재 박인동 김창석 한정훈 원경숙 강성배 나양주 오성주 한장용 김봉화
최장원 한용환 황철진 김덕기 이유미 서경수 김태환 한준구 윤도현 강연희 남기원 오순혜 허남두 김상열
최재민 한태경 황호식 김도영 이은재 신희권 김학성 홍명근 윤성원 강정숙 남덕희 옥근호 허추구 김선호
최재용 한홍열 황효열 김동식 이재문 심제원 김형만 황대중 윤순모 강정효 남희정 옥방호 허희경 김성자
최정욱 함도용 황훈주 김미경 이정식 유주상 노귀남 이광종 강창수 노승복 옥춘금 현정임 김소윤
최정표 함동균 황희정 김석기 이정아 이대순 당명숙 **강릉경실련** 이귀녀 강학도 노재남 옥충석 홍성태 김수연
최종일 함두호 김성수 이제선 이덕우 문행규 이숙희 경명자 노재천 옥혁수 황분희 김수진
최준용 함영선 **경제정의** 김세용 이주희 이명근 박경서 고석태 이요한 고석진 류금렬 우정숙 황점득 김승복
최준혁 함형욱 **연구소** 김영 이창수 이순기 박금해 고재정 이윤일 고영주 문상모 원순실 황한성 김애란
최중길 허남종 김재령 이현주 이영길 박성극 구광범 이은주 권대용 문상필 유차상 황황욱 김영근
최중민 허동일 곽수근 김재익 이희승 이지연 박용현 권상동 이정임 권민호 박광호 유천업 김영미
최지한 허범녕 김범 김종길 임경수 이진 박은주 권오석 이제영 기산종합 박대기 유태영 **광명경실련** 김영필
최지훈 허병권 김지환 김준현 임영희 이창수 박준우 김남두 이주석 건설(주) 박명옥 윤길정 김용관
최창배 허석 김혁 김철홍 임형백 이태호 박준형 김남영 이지은 김경덕 박성호 이광재 강성철 김용길
최창호 허수범 노영록 김태호 장명진 장영 배인교 김대진 이진아 김경섭 박수정 이도영 강신재 김원선
최철호 허정준 문인철 김형욱 전은호 장윤정 배종근 김덕기 이효숙 김경수 박순옥 이맹화 강옥영 김윤권
최철호 허종호 박상안 김호현 정성훈 장진영 서관승 김동명 임명희 김권수 박애숙 이상귀 강옥희 김윤옥
최철화 허지영 백승호 나인수 정애리 전종찬 송정호 김만재 장선애 김귀호 박용안 이상천 강윤숙 김윤재
최혁 형성훈 백종효 남은경 정인환 정경수 신영욱 김봉래 전규화 김기만 박인근 이성호 강주례 김윤호
최호영 홍광선 성호준 노두승 조돈철 조영관 신종성 김석래 전방욱 김대봉 박태원 이양식 강찬호 김은진
최홍엽 홍대식 손창민 노웅래 조우현 추승우 안춘훈 김선연 전영권 김민수 박혜수 이외자 강희규 김재성
최희수 홍도천 송운학 도선붕 조재형 하성용 위정희 김선정 정광민 김상기 반영진 이은경 고미라 김정
최희수 홍미미 여은미 류성룡 최강림 윤영전 김재부 정석중 김상일 배동주 이응선 고영원 김정미
최희준 홍성균 윤언철 류중석 최두호 **통일협회** 윤태룡 김재준 정세환 김상호 백세정 이장명 고완철 김정숙
추동균 홍성환 이덕호 민범기 최명철 이승규 김정근 정의호 김석준 백순환 이장표 고재원 김정자
추우성 홍순관 이승훈 박경난 최봉문 강만성 이우영 김중남 정의훈 김선심 백승일 이정택 고형복 김종임
하상준 홍순영 이혜란 박상위 최윤정 강은석 이점호 김진숙 정혜진 김세린 서주종 이종우 곽도훈 김종진
하용호 홍영희 임효창 박성우 최정우 고석주 이정우 김진욱 조무현 김수현 서현주 이주일 곽병미 김진경
하윤진 홍종학 정길채 박연환 하동익 고유환 이종수 김태희 조백훈 김승한 성만호 이철용 곽온 김진숙
하재연 홍종화 정흥준 박영웅 함승희 곽일환 이진만 김학군 진수환 김영우 성환웅 이헌길 구교형 김진일
하재헌 홍준표 천미림 박정윤 허도한 권수복 이현희 김형경 최규천 김영화 손성미 이형로 구차환 김철수
하현아 홍준현 하능식 박찬우 현철재 김근식 이화용 김형근 최복규 김옥희 손은희 장석주 권순남 김학준
하현진 홍진구 홍창식 박희정 김동규 임홍승 노영성 최송길 김용운 손정식 전갑생 권혁이 김현정

김현정	박준서	오민석	이혜진	최영자	김길현	박성수	안현석	임정휘	한희주	김형균	이상도	강왕근	이경은
김현희	박진석	오성님	이호석	최재석	김남수	박수인	양동윤	임종연	허기석	김휘연	이성칠	고계곤	이상운
김혜정	박춘선	오혜란	이호열	최철규	김덕은	박양우	양명희	임현철	허문수	김휴진	이영애	고덕영	이상춘
김효숙	박태준	우동훈	이효성	추규호	김동옥	박영덕	양성호	임형채	홍영신	김희진	이원희	군장에너	이석진
김희수	박형근	우병설	임삼례	티제이티(주)	김동헌	박옥란	양현인	임형칠	황덕자	김희철	이정건	지(주)	이선덕
나혜진	방소현	원범재	임진희	하숙례	김문수	박용수	양혜령	장의수	황동현	나영란	이제수	김부영	이유설
남기표	배권식	유수연	장선	한긍희	김미남	박웅	엄창수	장익	황보관석	나효훈	이종률	김영혜	이종암
남윤화	배준	유흥우	장진아	한상미	김병철	박이화	여상구	전홍모	황윤용	노상진	이창형	물빛가운	이희재
노병일	백정순	윤문선	전광섭	한윤선	김상국	박정열	오경례	정강택		라병희	이태동	박은아	임구원
노용래	변미애	윤승형	전종석	한창옥	김성일	박종근	오미정	정두숙	**구미경실련**	박성도	임은기	석도국제	전균섭
노혜숙	변성수	윤종미	정민정	한홍기	김수영	박종렬	오지혜	정병호		박성표	임주석	훼리주식회사	조용석
노희준	변한주	윤철	정병오	허기용	김순재	박준곤	오치홍	정상문	강명천	박순이	장기태	세종기획	조재용
류경희	서두원	이강순	정상영	허성우	김영규	박찬숙	유방실	정용완	강승수	박영주	장문석	심규만	차숙희
류미숙	서방자	이건복	정선유	허정호	김영길	박창기	유영표	정원태	강신웅	박응도	장세광	씨제이	최경용
류정희	서삼례	이금숙	정애숙	허종은	김영남	박창수	유현	정윤남	강현주	박이숙	장연덕	대한통운(주)	최충식
마아인	서순자	이기영	정유석	허창순	김영채	박창헌	윤두종	정은수	고영호	박재욱	장종길	정동원	하수진
문진숙	서용원	이로사	정은영	홍은선	김영현	박철웅	윤봉란	정일용	구자근	박정구	장준우	홍관표	한성수
민찬식	서유리	이말복	정은희	홍진호	김영환	박태규	윤봉영	정찬용	권구일	박정훈	장흔성	홍기원	호희국
박경옥	서은경	이명숙	정인애	황인란	김용태	박형철	윤원진	정혜경	권보	박주영	전윤한		황유민
박계량	서이석	이미경	정중한	황재연	김인수	배백호	은광석	정혜련	권순서	박현우	전호갑	**군포경실련**	
박광수	소문주	이미희	정지선		김일호	배용태	이기만	조경록	권윤택	박형진	정제봉		김포경실련
박기은	손선주	이병렬	정진우	**광주경실련**	김재중	백석	이길남	조광득	길윤옥	배상길	정진수	곽 도	
박명은	손솔이	이병순	정찬규		김재찬	백익순	이동민	조교영	길호양	백승국	정택균	국정아	(주)신원
박문경	송경섭	이병철	정학균	(유)용진	김정훈	백종기	이명구	조선익	김경훈	변창우	정택동	권영훈	렌터카
박미경	송혜선	이복자	정혜경	에너지	김지인	버스조합	이봉주	조성식	김귀화	성병근	조경래	김대옥	강명자
박미영	신가람	이부순	정희균	(주)대한가	김창재	변동철	이상걸	조인형	김낙관	성종운	조재형	김석헌	김남규
박미정	신동렬	이석석	정희진	스산업	김철현	변원섭	이성각	조재곤	김도형	소평진	주광정밀(주)	김애경	김두관
박미정	신민선	이성숙	조범상	(주)영암마트	김해룡	변재영	이성근	조현지	김동욱	송철원	지대근	김연승	김문경
박미화	신복인	이성진	조상희	(주)해양도	김현	서민호	이성길	주경님	김문환	신미정	최근애	김영희	김미자
박민관	신성은	이송재	조아라	시가스	김현모	서상기	이승노	주호연	김보준	신주식	최낙렬	김재용	김영로
박민영	신숙진	이승봉	조옥경	강신주	김현석	서상기	이연	지명순	김봉교	심재필	최서규	김창호	김용훈
박복임	신영옥	이양희	조은하	강은섭	김현중	서수연	이은방	지병근	김성만	심정규	최선경	문홍민	김종열
박상윤	신윤철	이언주	조태섭	강정미	김현철	서재형	이인수	지현도	김연고	양진오	최선호	박노수	김준현
박서윤	신은숙	이연숙	조해성	강현수	김효중	서해자	이재석	차현승	김요나단	엄상섭	최연호	박상훈	김진희
박성민	신혜정	이영신	조혜주	고근	나미영	선종아	이재윤	천재영	김윤희	오경숙	최은경	박수호	김창집
박성배	신혜진	이영희	조화영	고려가스(주)	나병철	설상욱	이정근	천형욱	김은희	오영재	최자경	박정민	김철경
박성영	심상록	이원영	조흥식	고려가스	나성영	성인규	이정량	천홍석	김응종	유준호	표상욱	박충수	김형창
박승원	심혜진	이윤식	주태진	(주) 광주	나흥덕	소범환	이정주	최동기	김인순	윤달근	하영백	박평식	남기후
박영훈	안경애	이은경	지미선	고형석	노희정	손성만	이정학	최영남	김재욱	윤상훈	허심덕	박희찬	남익선
박옥남	안석모	이은상	진장호	공수현	류한호	손점식	이종성	최용석	김재훈	윤순덕	허진	석경수	도현순
박은경	안철환	이은영	차병일	구희선	모현숙	손희정	이준영	최윤정	김종배	윤종석	홍인수	송지영	류문식
박재철	양금석	이은재	차성미	권충화	문정찬	송원식	이학균	최정구	김종욱	이관순	황효숙	심상선	류승범
박재희	양기대	이재춘	차정운	기우태	박광복	송윤주	임가춘	최주영	김종율	이덕수		심재숙	문태식
박정선	양정현	이정희	최경자	김경미	박남규	송형일	임동훈	최진규	김준희	이명숙	**군산경실련**	안종호	문현미
박종기	양철원	이중석	최경화	김경원	박미정	신은희	임성태	하주아	김진억	이명희		양해택	민경환
박종미	양희연	이현우	최미곤	김경현	박병규	신재안	임숙경	한명석	김진희	이미경	(주)김장독	오승원	박광근
박종빈	오광덕	이혜수	최미영	김광영	박병일	심재훈	임영범	한샘	김철광	이미숙	1001안경*	유미하	박만호
박주한	오명희	이혜진	최상철	김기보	박상원	안영균	임정훈	한신구	김현미	이민호	콘택수송점	유애순	박병돈

박연희	채신덕	김미화	박영식	윤홍식	정은숙	구범림	김태훈	신창호	이학재	한기평	김홍석	양명희	조순형
박정원	최영미	김민석	박은영	윤희주	정재근	권은남	김현조	신현진	이현대	한성림	김희환	양승희	조영교
박태순	최재웅	김병규	박종률	이강태	정제영	권의경	김현택	신혜영	이형복	한화교	노경윤	양영주	조용호
배건웅	한성식	김상돈	박종익	이경애	정태완	권종	김현하	신희권	이홍범	홍성연	명근홍	양판승	조준범
백종일	한재혁	김상진	박종철	이경탁	정해용	권철명	김형태	신희영	임윤택	황의달	문귀일	오민정	차경아
신광하	한혜경	김상호	박준상	이경화	조락현	김금숙	김혜천	심영주	장복수	황재익	문영덕	오승주	천현종
신명순	허우섭	김선완	박한승	이근원	조방희	김기남	김홍숙	심응무	장인성	황혜정	문웅	오형열	최병기
신상천	홍석만	김선희	박해식	이미정	조성제	김기범	노경욱	안경래	장인철		민경준	원요준	최연식
심상용	황인문	김세화	배병두	이병화	조용원	김길순	농업회사	안병진	장형근	**목포경실련**	민찬홍	유경생	최완수
심영섭	황인순	김승환	배은정	이봉우	조인지	김동선	법인 호천	안영찬	장화식		박강일	유광호	최일
안철환		김신호	변부형	이부용	조정학	김명경	식품(주)	안재준	전영춘	강병국	박근영	육준혜	최재경
양미화	**대구경실련**	김영권	서정걸	이상록	주태환	김명제	대림유통	안종훈	전혁구	강병조	박문옥	윤치술	최종명
양영재		김영모	서종철	이상천	지우	김명주	도남선	오세윤	정상배	강성태	박미영	이덕일	최호길
어중석	(주)나남커뮤	김용두	성영락	이상필	진연수	김병국	명을식	오원관	정상훈	강영태	박석일	이명희	최환석
오미애	니케이션즈	김용찬	성윤상	이상화	차진근	김상환	문경재	오종섭	정상희	강제석	박성일	이문희	하상복
오흥미	감신	김윤호	손광락	이선혜	최동학	김성민	문정수	오학석	정승래	강주천	박성진	이범수	한상효
옹심이	강연환	김재범	손상호	이성우	최우곡	김성용	박근영	우금옥	정우택	권인철	박세훈	이병채	한태연
칼국수	경희창	김정렬	손상흠	이연재	최원아	김승일	박상훈	원용철	정은선	김경순	박소영	이상권	홍건숙
원용벽	계양엔진	김종웅	손승완	이윤호	최은영	김양호	박성진	유기완	정인구	김경옥	박송춘	이성로	홍국선
유양옥	종합상사	김종태	송상수	이장수	최종만	김영기	박영순	유병연	정현재	김경철	박숭채	이인수	홍근표
유영록	공영선	김종태	송순임	이재민	최준호	김영모	박종대	유인규	정희대	김관옥	박승옥	이재광	홍석준
유호석	공재식	김지현	신동기	이정웅	최한경	김영석	박종석	유인수	조민정	김광배	박영용	이정진	홍순길
윤명자	곽덕환	김창수	신영섭	이종경	최한석	김영주	박준혁	육정임	조석귀	김광창	박용묵	이종화	홍진표
윤미숙	곽동주	김천일	신용우	이지영	하경태	김영희	박희조	윤경수	조성천	김대근	박인웅	이찬식	
윤상연	권기억	김태선	신흥권	이진태	하순화	김영희	방명덕	윤주병	조순오	김두영	박정석	이천호	**부산경실련**
이경화	권대우	김태수	심병철	이진현	한상인	김욱	방정희	이건희	조승래	김명숙	박정희	이철수	
이경희	권병훈	김태우	심준섭	이진희	한종해	김원숙	배동국	이계자	조용석	김명진	박종두	이한경	(주)경성
이기형	권오숙	김해철	안영석	이창건	허인설	김원희	배효상	이광자	조용태	김명철	박종범	이헌종	에너지
이두열	권오준	김현조	안화석	이창용	홍승활	김은주	백정웅	이광진	조윤제	김문재	박창수	이형오	(주)부산은행
이부형	권윤집	김효진	양우준	이해숙	홍희청	김응배	백희숙	이범규	조항범	김민희	박창윤	이형완	(주)시티캅
이재홍	권태윤	남동강	양원규	이형태	황광석	김응하	서동국	이병승	조혜형	김보현	박철수	이홍성	(주)지윈드
이정규	권택중	남동헌	엄붕훈	이호석	황병일	김인철	서영석	이선경	주옥규	김성두	박한호	임동관	스카이
이정수	권휘동	남운환	엄인용	이희영	황정현	김재경	서영완	이성일	주정봉	김성철	박해령	임종석	강경태
이종기	길성민	남인철	에스제이	임종오	황종숙	김재석	서재열	이승복	중앙로1번	김수경	박혁진	장미	강규성
이종준	김강식	노영희	건설(주)	장석희		김종선	서정원	이승용	가운영위원	김승호	박현희	장은숙	강대영
인희옥	김경민	노윤경	여우현	장우석	**대전경실련**	김종하	서준수	이시혜	회-정인수	김신규	박흥식	장종국	강미라
정일환	김대식	대성	영남이공	장은숙		김종학	서해림	이영수	진동규	김영태	배상기	전종국	강민석
정정숙	김대진	에너지(주)	대학교	장해열	(주)동그랑	김주홍	서흥원	이용훈	진동섭	김예영	백재봉	전철균	강민수(2)
정희상	김도영	동영건설(주)	오서운	장호경	(주)마루농산	김지윤	성기석	이윤숙	차정민	김정민	서이채	전철영	강민정
조승현	김도한	류규하	우동락	장호열	(주)한마음	김진숙	손대근	이윤행	최경호	김정아	송미승	정남준	강병석
조영철	김도형	맹일영	우형택	전상훈	푸드시스템	김진영	송민호	이인세	최경훈	김종숙	송영종	정명오	강병호
조용문	김도형	문효상	유성근	전영선	강다은	김창근	송영환	이재민	최낙구	김종익	송진호	정승임	강성태
조용식	김동석	민영창	유성호	전재호	강명자	김창숙	송유숙	이재영	최봉문	김종호	송홍범	정영창	강시명
(명신한의원)	김동철	박경욱	유영억	정경선	강승연	김충신	송윤	이정(벼	최영란	김창세	송희진	정진대	강예윤
조종석	김명수	박동환	유영환	정문정	강재규	김쾌환	송인걸	리푸드)	최이성	김태중	신관용	정혜수	강유동
주식회사 대	김명혜	박병준	유왕근	정성윤	고나현	김태연	송주섭	이정구	최장환	김태현	신재범	정호원	강인중
한진공엔	김무중	박병호	윤태우	정연욱	고태선	김태현	신상헌	이종범	최정우	김판조	심재경	조기석	강정규
지니어링	김문한	박승철	윤현식	정영은	곽기용	김태호	신선호	이철은	한경이	김하성	안영하	조성익	강주하

강중묵	김병기	김은숙	김호범	박용한	서현수	신형이	유재기	이상백	이현우	정민재	조은정	하주수	김명섭
강태문	김병용	김은영	김홍재	박윤기	서현식	신혜숙	유재엽	이상진(2)	이현제	정상문	조종석	한기성	김미정
강필원	김병하	김은주	김홍태	박재본	서혜숙	심건해	유재중	이상현(2)	이현주(3)	정성문	조준영	한병무	김미정
강해상	김보엘	김인한	김홍휘	박재욱	서호영	심미예	유정기	이선희(2)	이훈전	정세자	조지혜	한병철	김병욱
강형숙	김복준	김장섭	김훈	박재율	서효정	심상조	유정동	이성권	이희길	정순영	조홍규	한상준	김부석
경규성	김봉국	김재경	김훈태	박재홍	석승희	심성구	윤강훈	이성열	임무진	정순일	조효제	한성국	김상기
고명석	김봉규	김재명	남경태	박정구	석진열	심윤정	윤경만	이성환	임우택	정신모	주수현	한성안	김선일
고순생	김부근	김재식	남기찬	박정숙	선근우	심윤정(2)	윤기혁	이성훈	임종수	정애니	주식회	한재철	김선철
고인홍	김부민	김재일	남영현	박종덕	선석렬	심인섭	윤나영	이성희(2)	임호	정영점	사무학	한종석	김성권
고재일	김분이	김재찬	노경조	박종수(2)	설광석	심형철	윤동혁	이소정	임훈	정용성	주안나	해운대	김성근
고정연	김삼문	김정량	노광진	박주원	설호석	아영아	윤상미	이순정	장귀봉	정용수	주재민	블루라인(주)	김성미
공병승	김삼수	김정민	노상훈	박진성	성병창	안명석	윤상현	이승우	장다감	정은선	지경아	허두불	김성욱
곽원병	김상길	김정수(2)	노영욱	박찬일	손병열	안문상	윤석준	이영갑	장문숙	정장한	지은아	허민도	김성율
구명종	김상배	김정숙	노일용	박철중	손상용	안병록	윤성미	이영신	장문정	정재호	진동식	허진욱	김수자
구주영	김상옥	김정순	노효길	박철한	손순용	안연균	윤수성	이영호	장봉주	정정대	진수진	허해녕	김수정
구효송	김상태	김정택	도한영	박태주	손영일	안원하	윤영태	이옥형	장선미	정종학	진효상	현지훈	김순복
권기철	김석준	김정현	류강렬	박한규	손원우	안원호	윤재성	이용주	장성호	정종화	차동박	홍경자	김순봉
권명섭	김석호	김종구	류위훈	박현욱	손정현	안재민	윤재철	이원경	장윤석	정주영	차동욱	홍봉선	김승길
권범현	김선년	김종기	류은영	박희선	손창옥	안종일	윤정선	이위덕	장재구	정지원	차진구	홍일표	김승숙
권성빈	김선미	김종기(2)	류종성	박희영	손창우	양대건	윤정현	이은화(2)	장준흠	정진걸	차창호	황범하	김승철
권오성	김성권	김종민	류진호	박희정	손치훈	양동열	윤지영	이을찬	장지태	정진교	천병훈	황보승희	김시형
권은경	김성근	김종한	모삼선	방성애	송순임	양시경	윤태환	이의자	장해욱	정창오	천상수	황영식	김연미
권재현	김성길	김주영	문규성	배광효	송원섭	양은진	윤현철	이일용	장희정	정춘희	천용욱	황인	김영석
권태섭	김성수	김주현	문상철(2)	배성훈	송은주	양재화	이갑준	이재정	전보익	정치금	천정호	황인구	김영식
권형윤	김성열	김주호	문재천	배수미	송재광	양종철	이강진	이재호	전선임	정쾌영	천현수		김영아
김가야	김성춘	김주희	박도영	배용준	송재은	양종필	이경학	이정남	전세표	정태효	최남연	**속초경실련**	김영호
김갑환	김성태(2)	김준기	박동범	배혜래	송정숙	엄세원	이권기	이정민	전용배	정하윤	최달옹		김웅일
김경일	김성호(2)	김진	박명흠	배화숙	송종두	여재호	이귀순	이정식	전우철	정한성	최병근	(주)강원으로	김원기
김경조	김성훈	김진필(2)	박미경	백평효	송종화	오병루	이규섭	이정이	전일수	정해균	최보규	강동우	김원일
김경택	김성훈(2)	김진현(2)	박미순	변희중	송종환	오상준	이규헌	이정향	전진영	정해명	최선아	강미심	김유경
김광식	김성훈(3)	김진홍	박미영	부두봉	신경근	오상환	이남기	이정호(2)	전찬일	정현돈	최성관	강석태	김유리
김길수	김수미	김찰영	박민우	부산도	신군재	오세룡	이남중	이정환	전현수	제미경	최수영	강신길	김은희
김남식	김수빈	김창희	박병만	시가스	신동욱	오연석	이동률	이정훈(2)	전호열	제연화	최승환	고영진	김인섭
김남일	김수자	김철도	박복용	부산발전	신동윤	오지영	이동윤	이종남	정광현	조래영	최영현	고인선	김일환
김달기	김승주	김춘덕	박봉수	시민재단	신만석	오철조	이동일	이종석	정권영	조명래	최원석	고현주	김재학
김대래	김쌍우	김태경	박석원	부산신용	신병훈	오태석	이동진	이종원	정규용	조명제	최원용	공정관	김정식
김대중	김영길	김태구	박선아	보증재단	신상구	옥동건	이동환	이종철	정근	조삼현	최은주	곽병용	김정인
김도	김영신	김태훈	박성수	사단법인 부	신상해	옥성애	이동훈	이종학	정기섭	조상희	최은희	곽종환	김정훈
김동명	김영욱	김태희	박성철	산광역시버	신성환	옥진우	이동희	이주헌	정달식	조수희	최재명	권종식	김종담
김동연	김영욱(2)	김학진	박성훈	스운송사업	신승균	왕인	이만수	이주환	정도영	조양래	최재호	길목	김종윤
김동호	김영주	김해몽	박세간	서경국	신영호	우명자	이명식	이준승	정동만	조연승	최정묵	김 철	김주철
김명석	김영호	김해영	박승제	서미화	신유천	우성칠	이미경	이중하	정동열	조영규	최진욱	김경석	김준섭
김명섭	김용섭	김향남	박시우	서범수	신인철	우정용	이민호	이진수	정말순	조용규	최철원	김경순	김진태
김문규	김용원	김현욱	박연수	서봉원	신정희	원허	이병기	이진수(2)	정명길	조용언	최혜경	김계남	김진태
김미경	김용필	김현재	박영봉	서수금	신철성	유수윤	이병준	이청재(경	정명식	조용한	탁영민	김남춘	김진희
김미경(2)	김원태	김형균	박영현	서양수	신해송	유영명	이병진	성유압)	정명희(2)	조유장	하상철(2)	김동수	김천수
김백철	김유경	김혜경	박용주	서은정	신향님	유영택	이병호	이춘구	정미경	조윤득	하성훈	김동순	김철민
김병곤	김윤영	김혜경(2)	박용하	서종석	신현무	유완식	이봉진	이학봉	정미한	조윤환	하순금	김말순	김철수

김철환	선영복	이건옥	장재수	탁동철	김봉균	박윤환	오해경	이창모	최진환	이옥기	김옥경	박홍래	이용진
김춘식	소문섭	이경상	장재환	통일자동	김성연	박은호	우양미	이창진	최찬호	이용호	김옥수	박희경	이정미
김충남	손병섭	이경애	장주열	차공업사	김시영	박익종	유병욱	이판수	하만효	이종철	김윤재	백영국	이정민
김태영	손재복	이관	전용성	고성관	김영기	박재관	유상태	이필근1	하순진	이천오	김은주	서정열	이정아
김형길	송경희	이기원	전이령	한살림	김영래	박재순	유재성	이필근2	하창호	임승규	김정란	서혜경	이주옥
김형기	송제철	이대복	정봉재	한상민	김영태	박정화	윤귀현	이해균	한경수	장동식	김제동	석진성	이창수
김호준	송종철	이돈섭	정상철	한성희	김완동	박제헌	윤두천	이현미	한경희	정순관	김종길	설점순	이천환
김희근	신대섭	이동균	정순희	한정숙	김용일	박준배	윤미경	이현순	한상복	정은희	김지영	성준모	이해나
김희정	신선익	이문규	정양언	함국기	김용철	박진순	윤석신	이호섭	한상율	정재현	김지훈	송창식	(하용녀)
남상진	신영근	이문성	정연미	함준식	김웅	박태경	윤희경	이희수	한옥자	주지은	김창근	신남균	이회대
노금희	신재민	이문영	정용주	허우린	김은하	박형순	이경섭	이희숙	한창균	최덕림	김창모	신동국	이희연
동병희	신종출	이미경	정원모	홍련암	김인석	박화진	이경환	임용순	한창석	홍상우	김창하	신병철	임명자
라용일	신창승	이병선	정윤희	홍명관	김재기	박흥덕	이국희	임태정	한풍교	황인용신	김철환	신윤관	임미선
문제용	신현식	이봉진	정은희	홍인숙	김재성	배창수	이금희	임혜경	허성균	경과의원	김초환	신장환	임현규
민현정	신흥사	이상정	정진용	홍전희	김정욱	백혜련	이길영	장명옥	허윤범		김춘호	신청하	장동군
박경미	심연흠	이상호	정홍기	홍해용	김종석	변영선	이명욱	장점숙	허현태	**안산경실련**	김태훈	심규호	장동일
박경심	안경수	이언우	조광덕	황보해용	김종선	서상범	이민구	정계화	홍사준		김해만	양근서	장미진
박경자	안국자	이열호	조명수	황시영	김종오	서수정	이범선	정문호	홍영호	강경호	김현삼	양태호	정명숙
박계화	안세준	이영선	조성열	황영필	김종합건축	서정근	이범주	정수진	홍종수	강기성	김현호	양현석	정세진
박근철	안종석	이영수	조현국		사사무소	서정욱	이봉로	정순혜	황경희	강수문	김형욱	오관영	정승현
박덕희	안종원	이영순	주대하	**수원경실련**	김준혁	서환	이상명	정양훈	황대호	강수진	김혜숙	오남숙	정안철
박만용	양영희	이우영	주영래		김직란	서흥석	이상애	정원제	황민석	경삼수	김혜영	오은석	정연주
박명종	양진옥	이운연	주용헌	(주)청영건설	김진한	성기원	이상해	정태정	황성우	고관	김호득	오정순	정용기
박병훈	양해준	이은희	진장수	– 최영옥	김청극	성명순	이성호	조경두	황용원	고미나	김화궁	오진호	정은식
박상준	어주하	이인숙	진형배	강미경	김충관	성현구	이성희	조규만	황지숙	고영인	나정숙	오현주	정은혜
박성진	엄경선	이재선	천성미	강민철	김해영	손성배	이수행	조병모		곽도훈	남기순	오현주	정이진
박성한	엄천수	이재정	천성필	강인선	김현태	손현미	이승호	조석환	**순천경실련**	곽태영	남양숙	왕은희	정정순
박세찬	엄태영	이종섭	최관식	강창환	김혜련	손혜정	이영인	조승백		권태근	남정애	원미정	정종길
박수경	오광택	이종식	최근석	강학천	김효근	송원찬	이영주	조영춘	(주)세명기전	김경미	도원중	유창희	정진욱
박승민	오모현	이종식	최길순	강희진	김훈	신경환	이용욱	조은석	강철호	김경숙	류영숙	윤다미안	정철옥
박영덕	오승택	이주연	최돈환	고기준	나민수	신동섭	이용호	조형훈	김미정	김경애	문강섭	윤명숙	제종길
박영희	오윤택	이중길	최동권	고병억	나태성	신지훈	이운창	주광애	김선명	김기범	문연숙	윤상민	조경래
박웅기	오흥월	이진여	최동훈	고재흥	남택진	신한미	이원욱	주영수	김성숙	김기회	민병권	윤성웅	조안호
박정민	원은주	이진형	최서호	구본숙	노종용	심재광	이원재	주영훈	김성준	김대일	박경용	이갑순	조재기
박종갑	유성봉	이철	최성주	권후남	도진욱	심현자	이윤규	지영호	김종선	김동인	박경종	이강숙	조충현
박종학	유영민	이태열	최승명	김경수	명홍진	안혜영	이의봉	진대운	김준호	김명연	박경태	이경란	주만수
박종헌	유영창	이필선	최애리	김경호	모성은	양우혁	이재문	진송주	김지훈	김민	박금자	이경석	최경숙
박종훈	유종완	이필순	최영미	김도형	민경록	양재철	이재식	진한종	김태호	김병재	박동신	이경진	최복수
박희식	유주희	이현녀	최용석	김동선	박관우	양진하	이재혁	최문태	김현덕	김복희	박상호	이근미	최영화
반영덕	유혜정	이현미	최유정	김동원	박다예	양홍석	이정원	최병정	나창수	김상혁	박성진	이미숙	최운
방대식	윤광훈	이호석	최종현	김말순	박동선	염규용	이정하	최석환	박재현	김석용	박승렬	이민근	최윤정
방원욱	윤규식	임대식	최지문	김미선	박성대	예인기	이종령	최성배	박철우	김성봉	박승희	이벽희	최임이
배석진	윤기순	임시연	최진철	김미옥	박승원	오동석	이종만	최영숙	비손이앤씨	김세원	박영준	이병욱	최재우
변성수	윤신남	임정길	최춘파	김미정	박승자	오동욱	이종주	최인수	서용현	김송철	박정희	이선희	최채림
변인미	윤재훈	임종회	최택수	김민수	박연순	오세환	이주연	최인자	신현일	김영림	박종호	이숙경	최현수
서영기	윤재희	장경민	최형덕	김민수	박완기	오완석	이주헌	최재훈	오정록	김영숙	박준연	이숙란	하은희
서은진	윤정은	장성원	최혜경	김백규	박용환	오일용	이진성	최종후	위미영	김영애	박태순	이양주	하혜경
석명환	윤준	장은선	최효섭	김복녀	박원호	오지현	이찬용	최진학	이상휘	김영희	박해부	이옥희	한수연

현유경	김후승	오경아	전재은	김성춘	고윤지	김성완	김호열	박창근	안봉섭	이강문	이종원	정승수	최은실
형천호	나진석	오성탁	전재현	김숙자	고인정	김성재	김홍태	박창근	안신실	이강수	이종한	정욱형	최인근
홍경남	남화선	유기용	전종덕	김영표	공미선	김세동	남기태	박창렬	안재영	이경수	이주윤	정유리	최인식
홍장표	노국환	유남숙	정동균	김정선	구경혜	김수동	남용대	박태문	안정민	이경호	이준호	정윤지	최재화
황영순	류호웅	유상진	정연준	김종구	구준모	김숙현	노필원	박태문	안창호	이광석	이중재	정윤희	최정관
	박기두	유선영	정영수	김주환	구지은	김순업	뚜레쥬르창	박형국	안철한	이광윤	이진관	정은영	최정숙
양평경실련	박민기	유영표	정주영	김희선	권광일	김순업	전사거리점	박홍재	안형동	이광재	이진혁	정은희	최정화
	박석두	윤경일	정하성	박병규	권순원	김연희	류시근	배경희	양정분	이기훈	이찬우	정인우	최종
강대우	박수경	윤덕규	정혜경	박선애	권순원	김영근	마상호	배정수	양희진	이길수	이창규	정일구	최종
강병국	박수형	윤성미	조경송	박성현	권영미	김영숙	마석홍	배증열	엄기홍	이길윤	이창수	정정순	최종악
강신우	박애경	윤수영	조삼현	박숙희	권영배	김영자	마석홍	변영구	엄태희	이명신	이창수	정춘화	최춘봉
강원정	박옥경	윤정원	조재국	배선주	권영진	김영자	마세진	변정해	엄희용	이미희	이천수	제영기	최현희
고봉철	박장수	윤형로	조춘선	서영남	권영훈	김영준	마애진	변정해	여재혁	이박우	이춘석	조경국	하맹수
고혜란	박태원	이경우	조향욱	서호영	권오섭	김영춘	목현실	부태길	여한수	이백선	이충환	조계만	하정순
구민진	박현일	이그루	조현주	심경택	권오주	김옥자	문미자	빈종진	오근철	이복수	이한표	조길문	하태길
권오병	방민경	이길한	조효미	심재수	권혁봉	김왕곤	문승욱	빈종진	오명환	이부경	이해철	조남슬	하헌홍
김경덕	배만병	이대형	지은숙	안성용	권혁왕	김용섭	문연래	사단법인에	오병재	이상년	이현숙	조병돈	한덕이
김경수	배연정	이동연	채 현	오경섭	기보중	김용태	민승례	이트참밍	오석호	이상원	이현숙	조생남	한덕이
김경희	배우한	이동준	채풍묵	오승석	김 준	김우재	박경룡	서성원	오성순	이상태	이현호	조용월	한돈집
김광윤	백종덕	이명규	천귀선	윤주헌	김강산	김운경	박경미	서원교	오성용	이상혁	이현희	조은미	한만준
김대우	서동일	이명춘	최갑주	이식	김경건	김웅제	박기환	서은숙	오형선	이석환	이호돌	조장래	한순택
김덕현	서상섭	이미순	최두영	이유형	김경률	김은이	박명순	서재호	우근배	이선	이호영	조정숙	한영순
김동운	서시온	이반석	최석운	이철	김경림	김은하	박명철	서정순	우순애	이선정	이호일	조종성	한영옥
김동현	서진숙	이상건	최성범	이평호	김경자	김은희	박병건	서희숙	우순희	이성훈	이훈	조철현	한은상
김명주	선유하	이선희	최소영	임호상	김경중	김은희	박병대	성주영	우종만	이순창	임명원	조춘순	한은상
김명해	성종규	이수진	최영식	장준배	김경화	김의섭	박상옥	성희연	우현녀	이승남	임상열	조택선	한정민
김민섭	송명원	이승용	최영준	정남숙	김광식	김인기	박상용	송경은	원경희	이양순	임상열	조택선	한정현
김민정	송애영	이연이	최진식	정대훈	김광인	김재순	박상임	송영득	원종수	이영우	임선미	조한영	한준학
김선자	송영배	이연호	하보균	정승환	김금녀	김재임	박상철	송영득	원종순	이영채	임성규	주상운	한준호
김성동	송요찬	이완용	홍성현	정정식	김기석	김재홍	박선규	송이식	유경윤	이영현	임성식	주상운	한준희
김수은	송진원	이용성	홍승희	정주현	김기열	김정범	박선영	송정호	유상열	이영훈	임승한	지소연	한희자
김순옥	신권대	이의협	황규영	제윤경	김기은	김정수	박성희	송창신	유상희	이옥희	임은혁	지정철	함연자
김순이	신도선	이자형	황순찬	조현혁	김기태	김정천	박수자	신계영	유승열	이용근	임철만	지효숙	허림
김양수	신민희	이정숙	황현주	천상국	김길홍	김종복	박양래	신덕선	유재경	이용만	임헌권	진선종	허범석
김연호	신순봉	이종인		한병세	김대측	김종원	박옥선	신동신	유재춘	이용연	임혁빈	차준은	허수행
김영선	신승한	이지연	**여수경실련**	한해광	김두환	김진영	박인	신동윤	유혜란	이우정	장경자	채봉수	허임범
김영학	신영희	이지은		홍춘식	김미혜	김진용	박인오	신동천	윤광석	이운용	장교환	천기영	허임범
김영환	신정원	이철규	강규호		김병기	김진창	박일엽	신두임	윤남선	이윤숙	장영란	천병기	허준환
김은미	신희정	이태환	강성훈	**이천여주**	김병수	김창균	박재선	신영호	윤남용	이은자	장원섭	천재영	현주섭
김주남	심민규	이향란	강용원	**경실련**	김봉덕	김창수	박재우	신완재	윤수영	이의성	장원주	최대규	홍경아
김주원	심재식	임다정	고용국		김상실	김춘자	박전희	신은순	윤수영	이익재	장재훈	최동규	홍성동
김지연	안경모	임승기	공성식	강경묘	김선우	김태진	박전희	신종옥	윤준호	이재범	전상진	최병주	홍원표
김진영	안영일	임정애	곽현철	강석립	김선일	김학경	박정하	신종옥	윤태범	이재용	전성호	최병탁	홍은하
김창현	안은경	임정지	권인홍	강신욱	김선희	김학재	박정화	신철승	윤태범	이재학	전영석	최복순	홍종민
김한일	안정희	임진택	권진구	강영애	김선희	김학훈	박종구	심관보	윤향숙	이정길	정병관	최성원	황경애
김햇님	안태희	장영달	김동식	강정순	김성국	김현미	박종오	심규대	윤혜숙	이정숙	정선옥	최옥명	황규문
김현진	여현정	장현실	김동채	강창영	김성국	김현숙	박종옥	심형모	윤희태	이정형	정성기	최용철	황규문
김호수	염충	전승희	김미순	고경애	김성길	김형식	박준모	안병운	은종원	이종송	정순현	최운용	황인동

황인재	김명제	김하운	방수환	오경환	이주용	조동암	**전주경실련**	이정	강인창	김칠수	**천안아산**	박종복	정병웅
황현숙	김무룡	김현식	배성수	오광민	이준한	조영희		이현희	강정임	문건식	**경실련**	박태서	정병인
	김미경	김효정	배승휘	오왈명	이지영	조용철	강원균	임규삼	강지용	박미현		박현희	정성진
인천경실련	김미영	김희연	배철현	오원선	이진준	조용화	강유정	임성진	강창균	박상미	강민숙	백우현	정진선
	김병우	나영우	백동수	유동현	이찬우	조현경	강창수	장석재	강태운	박승훈	강용봉	복아영	정치화
(주)디씨알이	김병철	나종팔	백민섭	유준호	이창훈	조현준	강현민	전기환	고광희	박재완	강은선	소삼영	정하진
(주)진영이엔	김봉수	나종훈	백완근	유진성	이철준	주춘식	강호수	정세윤	고미선	변성언	강인영	송용완	조영주
지-최춘옥	김상길	남봉현	변성준	유홍성	이충우	지석	곽이구	정태원	고병기	변정철	강태윤	송홍석	조하심
(주)한성라인	김상섭	남세종	변태수	윤관옥	이한용	진혁화	국승철	조선환	고봉수	부상원	강희두	신동현	주진혁
강경하	김상열	남지승	사단법인	윤대기	이현경	차경열	권미경	조영범	고상붕	부윤삼	고영술	신영철	최경식
강덕우	김선홍	남창섭	인천복합	윤동구	이현석	차광윤	김만식	조찬완	고석건	송대영	구본영	양경모	최경영
강명선	김설	남흥우	운송협회	윤명철	이현준	차동열	김병석	주재호	고석봉	송석언	구자형	양승조	최석남
강명수	김성근	노국진	서경옥	윤미선	이형구	차득기	김수태	진정현	고성봉	송순	김경은	오수균	최장온
강상곤	김성수	노승환	서부길	윤지의	이형수	최광용	김수환	채주석	고영빈	송승호	김길년	오승화	하종률
강석	김수자	도영운수(주)	서용성	윤호	이후삼	최광은	김용권	천상덕	고영수	신용헌	김문수	오인철	한문식
강석철	김승남	도지성	서태원	윤희정	임병구	최금행	김용휘	최낙용	고영식	안영철	김미경	유영길	한형규
강옥엽	김시철	류병희	서해안	윤희택	임승관	최두영	김장기	최동성	고정훈	양문석	김미수	유진영	허종일
강정호	김연옥	류제홍	성기건	이경우	임준택	최병길	김종원	최문희	고태식	양백윤	김봉미	윤권종	홍영식
강태경	김연욱	명선목	성덕규	이귀복	임채훈	최상희	김주희	최요일	김강문	양봉석	김상관	윤일규	황규훈
고덕봉	김영구	명창준	성용원	이기태	임한택	최성원	김형식	최정일	김경용	양시경	김상철	윤정섭	황종헌
고성일	김영국	목동훈	손병옥	이길성	임현준	최성진	라형연	최종렬	김남혁	양우선	김세곤	윤종임	황천순
고재성	김영수	문동현	손장원	이다빈	임희숙	최인용	박규만	최진희	김동욱	오승용	김용진	윤주만	
고정규	김영옥	문상범	송경희	이도희	임희진	최일동	박명진	한병규	김동전	오영익	김재원	이경주	**청주경실련**
공규현	김영준	민근홍	송문성	이동기	장일진	최재혁	박복희	한상호	김명준	오정훈	김종문	이계환	
구자길	김옥산	박경호	송원덕	이루다	장정민	최정자	박상민	홍순필	김봉석	오종선	김종우	이명근	(주)세일
권경자	김용구	박명희	송인선	이리라	장조영	최정철	박효민	황병해	김봉철	유덕현	김진태	이병덕	(주)중부
권남구	김용미	박상찬	송태영	이린우	전동준	최준혁	성치원		김봉희	유두석	김철수	이상일	컴퍼니
권대현	김용민	박상희	신나영	이문의	전무수	최찬용	송약용	**정읍경실련**	김석	이성호	김태명	이상춘	강민오
권미정	김우경	박석민	신병철	이범열	전성식	최혜자	심동희		김선호	이숙희	김행조	이상호	강병용
권오경	김원화	박선홍	신영은	이병기	전영진	한기남	안수현	강창조	김성수	임숙자	김혜영	이서영	강병호
권오연	김윤태	박성인	신은철	이병철	전용성	한만송	안정훈	김용철	김성준	임정현	김홍철	이선열	강석형
권욱한	김은경	박수영	신종한	이상동	전준권	함지현	양영희	김을수	김세검	장원석	김효실	이수현	강성래
권정호	김은영	박순옥	심연삼	이상영	정기호	함창학	양창훈	김택술	김세희	장정훈	나아란	이순곤	강승구
김갑봉	김응철	박시우	심정순	이상훈	정낙식	허도병	엄상섭	김현	김수연	정상철	내일시스	이승열	강은희
김경태	김인수	박신숙	심헌창	이성한	정두용	허우범	오상현	박래수	김승필	조문수	템(주)	이원자	강진성
김경호	김재식	박옥희	씨레인보	이애경	정미경	허주형	유창엽	박영민	김신순	채호진	노덕우	이점순	강현구
김계원	김재영	박용해	우인터내	이연숙	정석환	허창희	윤영수	송민수	김양보	한남석	노순식	이종필	강호문
김관호	김종길	박윤수	셔널(주)	이영권	정선오	홍기석	윤태영	유사현	김영희	한용환	류임상	이종호	강호승
김광업	김종욱	박재윤	안동찬	이용우	정승연	홍욱표	은영주	이광호	김용범	허정아	류지헌	이철호	경준용
김광호	김종호	박준용	안병준	이용준	정연중	홍인성	은용우	이상길	김우준	현경호	맹창호	임승안	고상돈
김근영	김종화	박진석	안재균	이원구	정재영	홍인식	이민호	이성실	김원규	현계담	명진아	장기수	고영구
김남돈	김준우	박찬화	안희섭	이의재	정재윤	황규철	이보향		김익태	현미영	박미경	장순이	공공디자
김대중	김진영	박한정	양광범	이일희	정지은	황덕성	이선미	**제주경실련**	김인영	현종철	박민숙	장원철	인이즘
김도영	김진회	박현숙	양의만	이재학	정진오	황수연	이승현		김정수	현창석	박민자	장재식	곽규은
김동우	김창선	박형수	양희석	이정림	정창훈	황용선	이영식	강경희	김종훈	홍기홍	박복연	전오진	곽나현
김동호	김칭우	박흥열	엄연주	이정윤	정철	황재각	이장춘	강봉석	김진심	홍성화	박상면	전종한	곽덕신
김락기	김태호	박흥철	에스지이(주)	이종일	정희윤	황제우	이재윤	강영준	김창기	황경수	박수석	정구봉	곽승호
김명석	김태훈	박희제	여승철	이주영	조광희		이점수	강예닮	김창연	황병철	박종갑	정미영	구남휘

구병회 김병우 김일복 김효일 민광기 배응환 송혜근 연규용 유영숙 이만희 이정석 임재규 정은경 지동규
구안서 김병의 김재복 김희수 민선희 백미경 송효헌 연방희 유영아 이명순 이정수 임종승 정은희 지유석
권경미 김봉주 김재숙 김희숙 민승기 백승협 신경아 연영규 유응모 이명호 이정아 임지민 정인수 진종헌
권기승 김상무 김재춘 나채경 민청식 법무법 신국희 연영태 유재남 이명훈 이정협 임차남 정일기 차은녀
권미경 김상수 김재학 남기상 박관주 인 주성 신규식 연인하 유재일 이미순 이종수 임한빈 정일택 채희관
권성안 김선영 김정문 남성옥 박광수 변광섭 신동선 연철흠 유창범 이민영 이종실 임한수 정장영 청주농산물
권수복 김선희 김정웅 남성옥 박금순 변만수 신동예 염경수 유철호 이범석 이종원 임헌경 정재량 시장상가사
권영기 김성민 김정일 남연심 박기환 변민수 신명섭 염우 유충옥 이병관 이종윤 임혜숙 정지성 업협동조합
권오건 김성수 김정초 남윤빈 박남순 변상호 신명수 염은식 유행열 이병호 이종한 임희영 정지영 청주생활용
권오은 김성식 김종구 남종순 박문희 변성민 신명숙 오경아 유현덕 이복순 이주봉 장경석 정진아 품유통사업
권태성 김성중 김종기 네모토 마 박미애 변은영 신성길 오국진 유환철 이상규 이주선 장남운 정진원 협동조합
김갑용 김성천 김종철 사쯔구 박미영 변의수 신성일 오명진 육미선 이상식 이주형 장동대 정진하 청주성안
김강일 김성호 김종칠 노근호 박범혁 변장섭 신승주 오명환 육종길 이상종 이준수 장병순 정찬영 길상점가
김건도 김성희 김종태 노만균 박석현 변종윤 신언관 오미정 윤건영 이석구 이준희 장병희 정철 상인회
김건일 김송일 김종태 노재량 박성순 변필섭 신영창 오병건 윤관수 이석희 이중섭 장선배 정충선 최각규
김경애 김수열 김주복 노진호 박성호 봉원진 신영희 오상록 윤미정 이선미 이중헌 장영건 정태진 최경호
김경자 김수정 김준경 대신정기화 박세웅 봉윤근 신용재 오석송 윤병선 이선순 이중훈 장재봉 정희승 최맹섭
김경자 김수환 김준년 물자동차(주) 박연수 서건석 신용한 오세란 윤병희 이선우 이지숙 장홍래 조경주 최상범
김경호 김승효 김준봉 도경민 박영미 서길용 신철영 오연경 윤석위 이수복 이지영 장홍원 조경주 최상영
김계옥 김애영 김준수 도선붕 박영미 서미화 신태경 오영미 윤송현 이수영 이찬호 전광호 조규완 최상천
김관식 김양식 김준태 도승기 박영순 서완석 신해운 오영애 윤여일 이수한 이창록 전금식 조규호 최상희
김광남 김연식 김지연 두꺼비살림 박용연 서울고속(주) 신현규 오영필 윤정수 이순남 이철종 전금희 조동순 최성희
김광복 김영근 김진철 영농조합 박은경 서준철 신현식 오윤주 윤진현 이순호 이철희 전길자 조동욱 최영중
김광성 김영란 김창석 라윤애 박익규 서효석 신희숙 오재만 윤찬열 이승배 이한례 전년규 조성구 최우식
김광직 김영란 김천식 류규식 박인숙 석명용 심규석 오종영 윤태한 이승준 이해승 전동기 조성오 최운침
김광회 김영민 김철 류근모 박인자 선종열 심상학 오준영 윤한식 이연옥 이향숙 전병선 조수종 최원호
김교선 김영배 김춘희 류근윤 박인환 선지연 심수영 오창민 윤현우 이영로 이현수 전용렬 조승연 최윤정
김규설 김영식 김태성 류덕환 박재경 설경철 심영미 오태경 윤호영 이영숙 이현식 전용표 조영화 최은실
김규원 김영재 김태성 류연욱 박재관 성기남 심재원 오태진 이가빈 이영진 이현주 전우석 조용숙 최재일
김기영 김영태 김태희 류용걸 박재익 성창기 씨투넷(주) 오훈영 이건철 이영희 이형각 전창해 조원주 최종문
김길후 김영환 김평환 류우열 박종관 성환용 안병대 오희 이경수 이옥인 이형우 전희택 조윤행 최종예
김남진 김영환 김필제 류재욱 박종룡 소순창 안영숙 우상동 이경순 이유정 이혜정 정길재 조은애 최종익
김대광 김영희 김학구 류재형 박종을 손세원 안윤숙 우장명 이경희 이윤범 이호상 정란희 조을선 최종현
김대중 김완희 김학민 류지봉 박종혁 손윤희 안장헌 원광희 이광식 이은숙 이화련 정문섭 조일원 최진옥
김동수 김용규 김학실 류진호 박지영 손정훈 안종태 유경훈 이광용 이인우 이효숙 정미화 조정식 최진완
김동암 김용덕 김한슬 류찬걸 박진우 손효진 안창만 유광선 이광희 이일만 임건철 정병숙 조종호 최충진
김동욱 김용석 김현상 류학천 박철규 손희준 안창현 유광식 이귀숙 이일우 임근수 정상섭 조진희 최태호
김동일 김용태 김현주 류현숙 박철석 송광희 안태희 유국열 이귀형 이장희 임기중 정상신 조창영 최현숙
김동진 김용학 김현진 리드산업 박철완 송길화 양계인 유근수 이규선 이재덕 임동현 정상완 조항전 최형도
김두호 김웅규 김형규 개발(주) 박해순 송선호 양기정 유미숙 이기정 이재숙 임미애 정성래 조형규 최호균
김말숙 김원식 김형우 마재광 박현순 송은숙 양미선 유민상 이길재 이재영 임병락 정성희 주서택 표한홍
김명수 김유호 김형창 맹석주 박호표 송의천 양승주 유민채 이길환 이재영 임성진 정수창 주식회사 풍경섭
김명자 김윤모 김호숙 맹현숙 박희분 송일근 양영순 유선우 이대응 이재원 임성충 정순배 태양커뮤 하옥란
김문옥 김은옥 김호일 명정희 박희자 송재경 양원철 유성훈 이도영 이재원 임승빈 정연경 니케이션 하재성
김미라 김응철 김홍구 문성오 반영운 송재구 양찬섭 유순영 이동로 이재은 임용현 정영래 주식회사 하태종
김미숙 김인숙 김홍성 문종극 반주현 송재봉 엄경출 유승덕 이동진 이재춘 임은정 정영섭 팜필리아 한범덕
김미연 김인자 김환국 문희창 방현철 송태성 여명수 유시송 이두영 이재헌 임일수 정영희 주재구 한상화
김민호 김일경 김황래 민경억 배병기 송태화 연규순 유영경 이만형 이정규 임재경 정우영 주창백 한성원

한승환	허석렬	홍우표	**춘천경실련**	김용식	박미현	송창근	윤재선	이은영	전호성	한희민	회의소
한연수	허성만	홍응표		김정현	박상규	신선철	윤진현	이인섭	정의성	함태성	하상준
한영선	허영	황경수	고태규	김진상	박형일	신정미	윤학로	이종민	정휘돈	허영준	한희민
한원영	현상주	황락훈	권용범	김찬중	방명열	신혜숙	이관행	이희창	조성모	허장현	함태성
한은례	현진	황미화	길정숙	김한택	방수진	안호춘	이복연	임재선	조성자	허종영	허영준
한인섭	형미희	황선건	김광배	남수희	변용환	양태식	이상섭	전규호	진장철	황덕호	허장현
한정현	홍강희	황성주	김남철	남형우	변좌용	용준형	이상철	전근우	최희수	황혜숙	허종영
한종설	홍성학	황종빈	김대영	박경철	석영기	유제원	이석원	전동준	춘천상공	최희수	황덕호
함명옥	홍성학	황희연	김석중	박대진	손현기	윤장혁	이승준	전만식	회의소	춘천상공	황혜숙
함종철	홍승표		김영준	박도수	손흥주	윤재경	이원규	전성휘	하상준		

중앙경실련

사무총장	02-741-8566	윤순철
기획교육팀	02-766-5626	팀장 : 노건형, 간사 : 최윤석
회원팀	02-766-5627	팀장 : 채준하, 간사 : 윤은주, 이성윤
홍보팀	02-766-5628	
경제정책팀	02-3673-2143	팀장 : 권오인, 간사 : 오세형
정치사법팀	02-3673-2141	팀장 : 김삼수, 간사 : 서휘원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간사 : 조성훈
사회정책팀	02-3673-2145	팀장 : 최예지
국제팀	02-766-5623	간사 : 정호철
부동산국책감시팀	02-3673-2146	팀장 : 김성달, 부장 : 최승섭, 간사 : 장성현
(사)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4	팀장 : 권오인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팀장 : 남은경
시민권익센터	02-766-5624	팀장 : 윤철한
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5	팀장 : 윤철한, 간사 : 정택수
월간 경실련	02-766-5627	이사 : 음유정, 김용재

지역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031-253-2266

광역시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처장 : 고영삼, 간사 : 박유진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 조광현, 국장 : 최은영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 이광진, 국장 : 서해림
		갈등센터 국장 : 김원숙, 부장 : 이선경
부산경실련	051-761-3951	처장 : 이훈전, 연구소 국장 : 도한영
		국장 : 윤정선, 부장 : 배성훈
인천경실련	032-423-2950	처장 : 김송원, 국장 : 김성아, 팀장 : 이경진

경기 · 강원권

경기도협의회	031-253-2265	
광명경실련	02-2614-1224	국장 : 허정호, 부장 : 최미영, 간사 : 김정숙
군포경실련	031-392-3111	간사 : 황은아
수원경실련	031-253-2266	국장 : 유병욱, 간사 : 문은정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 고선영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 이종준, 간사 : 황규숙
이천·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 주상운, 간사 : 변정해
양평경실련	031-772-7199	국장 : 여현정, 간사 : 김은미
강릉경실련	033-645-0828	처장 : 심헌섭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 김경석, 부장 : 김미정
춘천경실련	033-241-9486	국장 : 권용범, 간사 : 오연옥

충청권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국장 : 이수희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 최윤정
		국장 : 이병관, 유영아
		간사 : 김미진

경상권

거제경실련	055-637-9451	간사 : 배동주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 조근래

전라 · 제주권

순천경실련	061-751-9993	간사 : 고선휘
여수경실련	061-643-2110	간사 : 최진숙
목포경실련	061-283-4571	간사 : 박미영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 서재숙
전주경실련	063-273-4903~4	국장 : 최수진
정읍경실련	063-536-6225	국장 : 김은정
제주경실련	064-726-2530	팀장 : 김신숙

빨래추니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제가 지은 노래거든요.
몇 년 전 가을에 생전 처음 노래 한 곡을 만들었습니다. 어설프고 그런데,
이상하게 술 먹고 집에 갈 때면 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노래 만들기 아주 좋은 계절. 이번 가을에 도전! 해보시죠.